






#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경로(敬老)와 혐로(嫌老) :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인권의 해답

| 일 시 | 2018. 11. 22(목) 14: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프 로 그 램

시 간	세 부 사 항
	사 회 : 사회인권과장
13:50 ~ 14:00	등 록
14:00 ~ 14:15	환영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축 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4:15 ~ 14:30	(사례발표) 현장에서 본 세대 갈등 및 화합 사례 (연합뉴스TV, 이준흠 기자)
<b>1 부</b>	<b>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과 진단</b> 좌 장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14:30 ~ 15:30	<b>발표1. (20분)</b> 노인 혐오표현의 사회적 현상과 진단 김 영 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b>발표2. (20분)</b>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본 노인차별 현상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토 론 (각10분)</b> 1. 송 오 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 2. 전 용 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15:30~15:40	휴 식
<b>2 부</b>	<b>세대 통합 전략방안 모색</b> 좌 장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15:40~16:40	<b>발표1. (20분)</b> 세대갈등과 통합의 미시적 기초: 젠더와 가족 박 경 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발표2. (20분)</b>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세대 통합 방향과 과제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토 론 (각10분)</b> 1. 임 흥 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2. 고 선 주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관장)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	마무리 및 폐회



# 목 차

## [ 사례발표 ]

현장에서 본 세대 갈등 및 화합 사례 (연합뉴스 TV, 이준흠 기자) ----- 1

## [ 1부 ]

### 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과 진단

#### ■ 발표 1.

노인 혐오표현의 사회적 현상과 진단

김 영 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 5

#### ■ 발표 2.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본 노인차별 현상

정 순 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9

#### ■ 토 론

○ 송 오 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 ----- 25

○ 전 용 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 37

## [ 2부 ]

### 세대통합 전략 방안 모색

#### ■ 발표 1.

세대갈등과 통합의 미시적 기초: 젠더와 가족

박 경 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43

#### ■ 발표 2.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세대 통합 방향과 과제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67

#### ■ 토 론

○ 임 흥 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 93

○ 고 선 주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관장) ----- 99



## 현장에서 본 세대 갈등 및 화합 사례

(연합뉴스 TV, 이준흠 기자)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sticky not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sticky note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 [ 1부 ]

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과 진단



## 노인 혐오표현의 사회적 현상과 진단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본 노인차별 현상**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경로와 혐로: 세대가 공존을 위한 해법

# 세대통합(갈등) 관점에서 본 노인차별 현상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돌

2018. 11. 22



## 목 차

1. 세대와 세대갈등
2. 세대갈등의 양상
  -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 3) 복지적 측면    4) 가족관계적 측면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4. 세대차별과 노인차별현상 분석의 문제점
5. 결론



# 1. 세대와 세대갈등

## • 세대의 정의 (박재홍, 2003)

- 비슷한 연대에 태어나 공통적으로 문화적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 세대만의 고유한 가치관, 정서, 태도, 의식,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단(cohort effect)

## • 세대구분법 (Mannheim, 1952; Bengtson & Oyama, 2007; 전상진, 2018)

- 연령(age): **나이**, 나름의 삶의 과제를 가짐(연령규범)  
생애과정의 제도화(Kohi, 1985), 정책적 세대.  
연령세대는 정체성이 없음
- 동년배(cohort): **경험**을 공유, 정체성을 가짐, 우리의식,  
정치적 세대



# 1. 세대와 세대갈등

- 경험의 공유는 한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세대차이나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세대 간 공유하는 역사,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벌어져 더 큰 폭의 세대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세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구자숙 외, 2000; 김윤정 외, 2004)

→ 세대갈등은 **세대차이**(generational gap)에 의해 시작 (최원기, 2006)

↓  
각 세대가 갖는 가치관, 선호도, 사고 및 행동방식에  
존재하는 **다름 또는 차이** (한정란 외, 2006)



# 1. 세대와 세대갈등

- 모든 세대차이가 세대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대립하고 있는 이념이 충돌하며 폭력 및 비방과 같은 특정 현상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세대갈등**이라고 함  
(최원기, 2006)
- **세대갈등은 고령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아님**
  -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늘 존재해왔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받음
  - 고령화 사회에서는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2-3세대가 공존 하던 시대에서 3-4세대 이상의 다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경험과 역사가 다른 세대를 이해하며 공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함



# 2. 세대갈등의 양상: 1) 정치적 측면

- **세대갈등은 세대전쟁론으로 발전**
  - 젊은이들 착취로 청년은 비참해지고 하위계층이 됨  
반면 노인들은 이익을 보고 화려한 삶을 즐긴다 생각
  - 시니어 권력모델(장로정):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정치  
노인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조직 탄생 ex. AARP
  - 이기적 노인세대가 자신들의 생애단계에 맞춰 복지정책창출  
ex.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 저출산 고령화가 노인의 지배를 현실화한다.
- **젊은 세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니 그 권리를 내놓으라 함**
  - 부모투표권, 청년할당제, 선거연령하향, 공직자연령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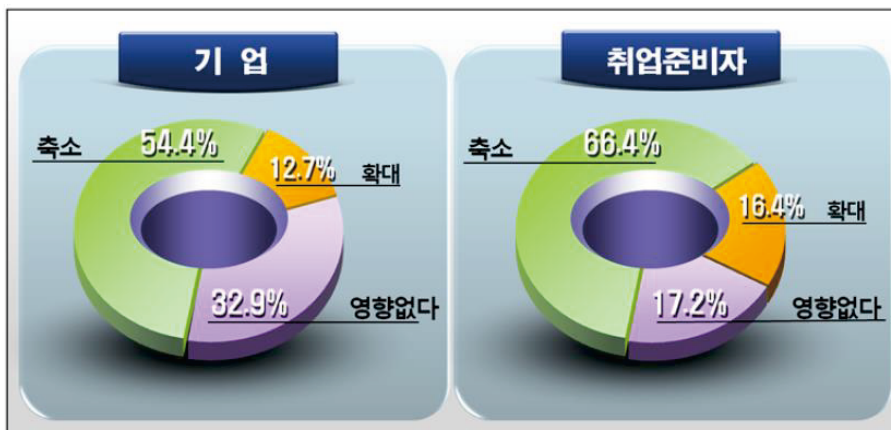
## 2. 세대갈등의 양상: 2) 경제적 측면

- 세대간 경제적 자원의 차별적 분포에 따른 상이한 이해관계  
(박재홍, 2009)
  - 노인의 고용증가와 청년의 고용율 하락
  - 청년의 정규직 비율감소, 실질임금하락, 부채증가
  - 노인의 퇴직후 소득급감과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
  - 세대간 경제적 자원의 차별적 분포 때문  
청년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관심  
노인은 자산가치 안정화, 부동산정책, 성장활성화 정책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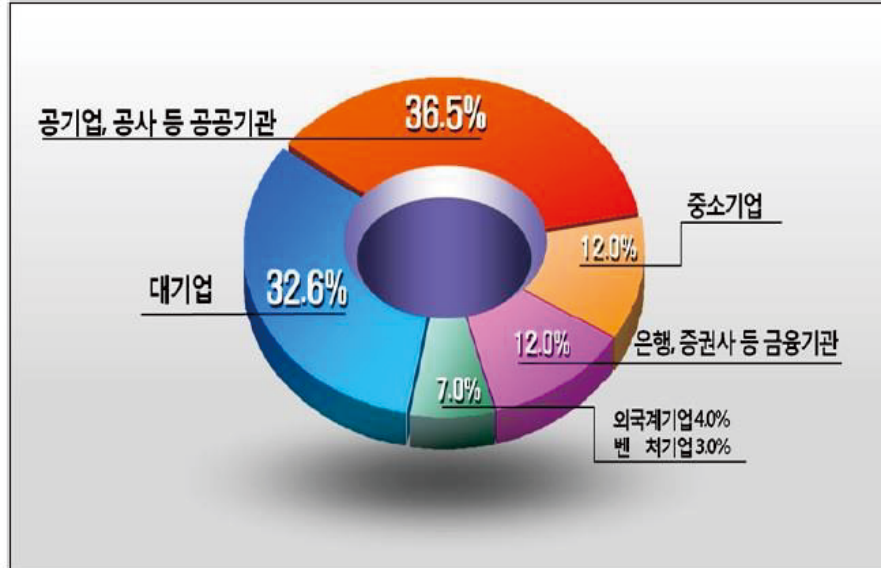
## 2. 세대갈등의 양상: 2) 경제적 측면

- 한국경영자총협회(2012)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 기업 316개사 및 대학 취업준비자 743명 대상 조사
  - 중/고령자 고용연장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인식
  - 대학 취업준비생의 3분의 2가 중/고령자 고용연장이 신규 일자리 잠식우려



## 2. 세대갈등의 양상: 2) 경제적 측면

- 고용연장 시 신규채용 축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일자리에 대한 취업 준비 대학생 응답결과
- 신규채용 축소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에 집중될 것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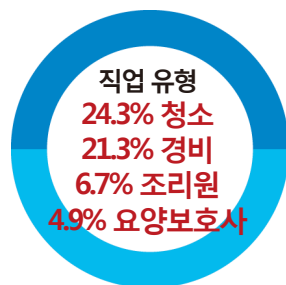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EWHAWOMANS UNIVERSITY

## 2. 세대갈등의 양상: 2)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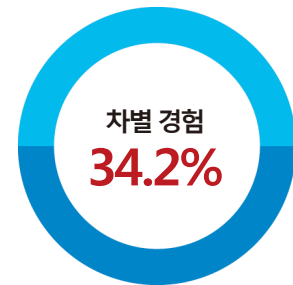
노인취업분야 실태 국가 인권위원회 (2012)



- 현 직장에서 근무 기간 2년 미만 51.3%, 4년 미만 23.7%
- 연령으로 인해 정규직 근무 어려움



- 고령 근무자 대다수 단순노무 계약직
- 임금총액 51-100만원
- 주당근로 47.8시간 >일반43시간
- 일자리가 주변화됨



- 근무지에서 차별경험한 노인 근로자의 29.7%는 업무 배분에서 차별경험

이화여자대학교  
EWHAWOMANS UNIVERSITY

## 2. 세대갈등의 양상: 3) 복지적 측면

### • 연령과 소득에 의해 정해지는 복지정책에서 세대갈등 출현

- 복지국가가 특정 세대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지 연구
- 국민연금, 기초연금, 무상보육, 수급권자 지원 등
- 공적연금제도 관련 문제는 주로 세대간 형평성 문제임

#### ex. Intergenerational fairness(justice) index(indicator)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비노인세대보다 많다.

아동빈곤율이 노인의 빈곤율보다 몇 배 높다.

노인들은 과거에 사회보장에 기여한 것 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소비는 높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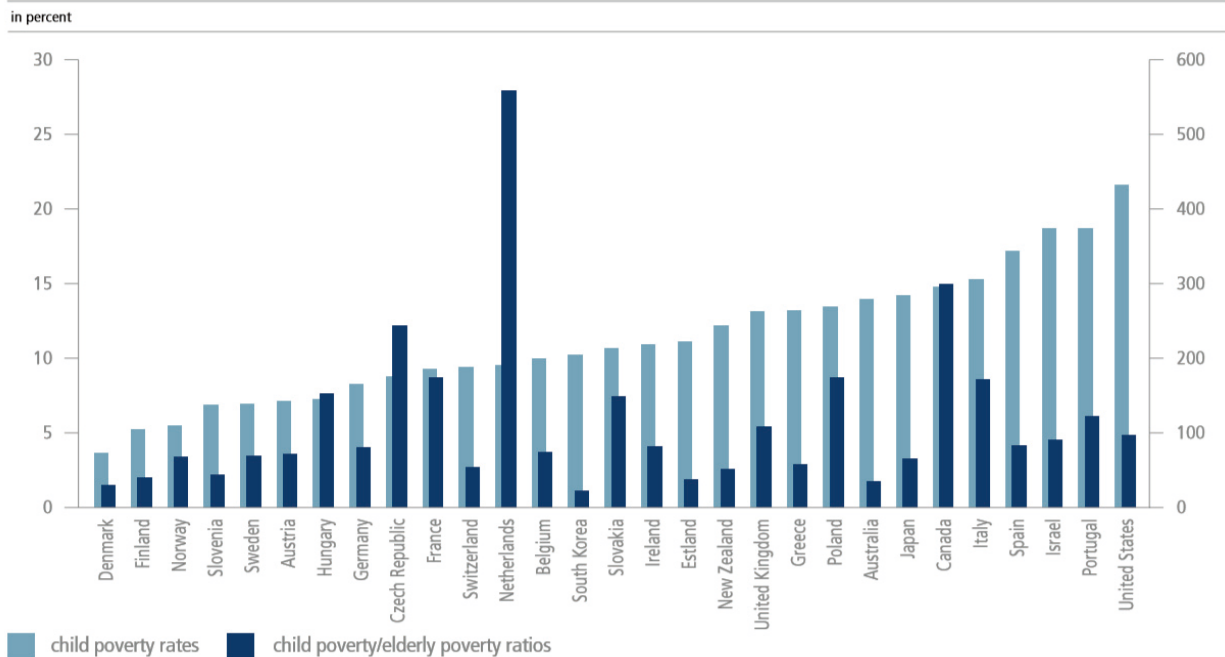
노인에게 급여를 주느라 국가부채는 증가한다.

### • 서구에서 노인은 공격대상이 됨



## 2. 세대갈등의 양상: 3) 복지적 측면

Figure 3: Child poverty rates (left axis), and child poverty/elderly poverty ratios (right axis), late-2000s



Note: Thresholds for both child poverty and elderly poverty are defined as less than 50 percent of media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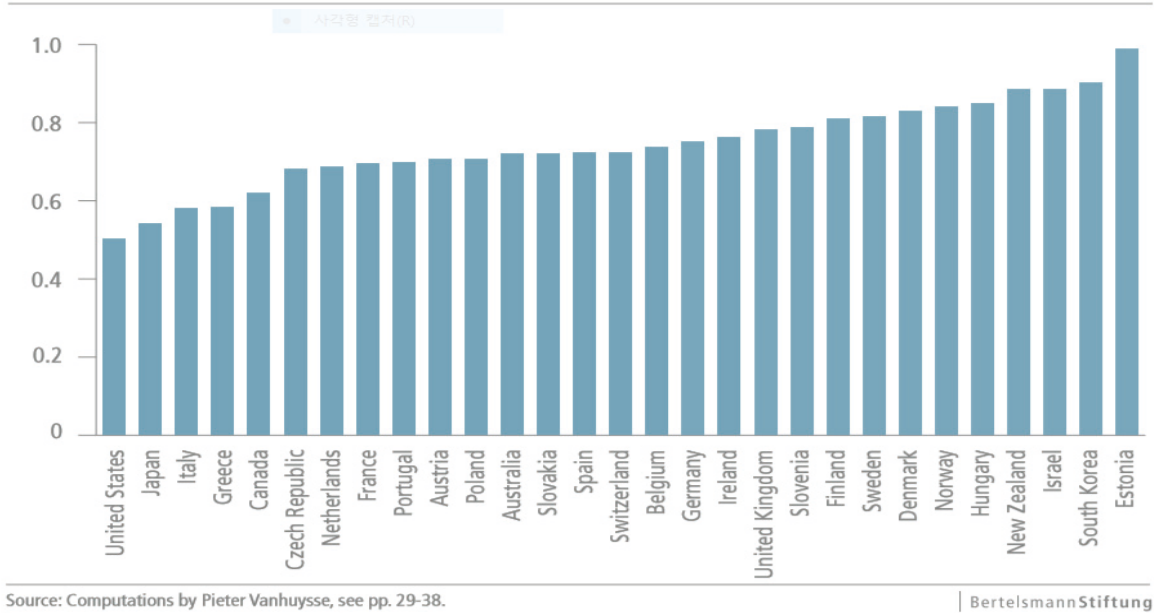
Source: OECD (2011).

BertelsmannStiftung



## 2. 세대갈등의 양상: 3) 복지적 측면

Intergenerational Justice – Overall Results



## 2. 세대갈등의 양상: 4) 가족관계적 측면

### • 가족내 다양한 세대관계의 경험

-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연대에 기여하기도 하고, 세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 효의식(경로)은 세대간 이해와 연대에 영향을 미침
  - 효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높음
  - 효의식이 높을수록 세대간 갈등을 낮게 인식
  - 효의식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
  - 효의식이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

(최유석,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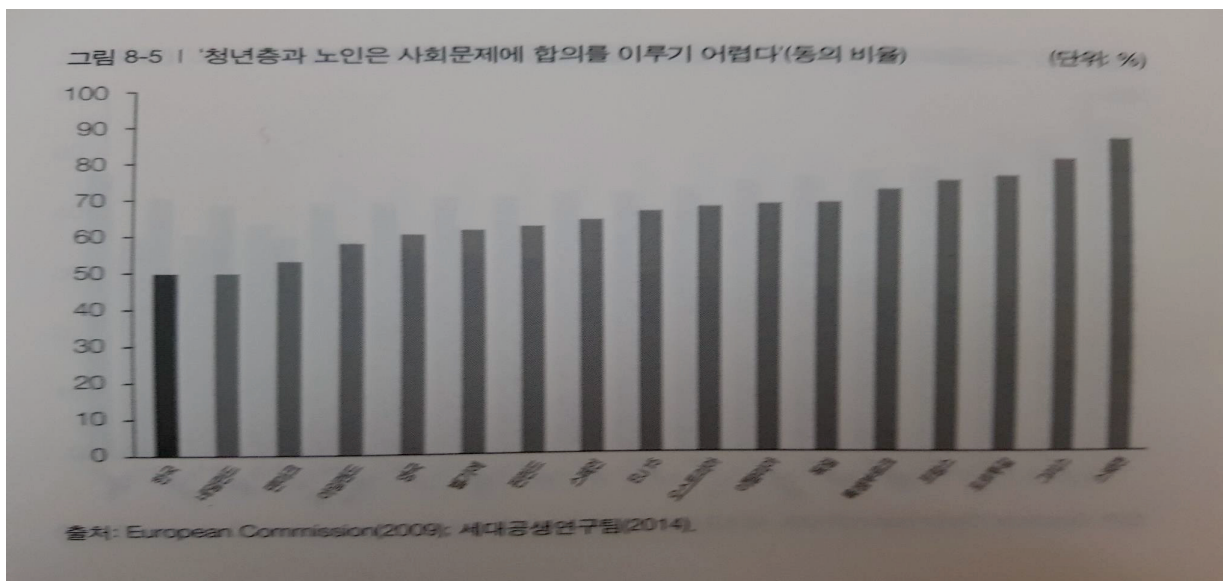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 노인차별적 태도 5문항** (최유석, 2016)
  - 청년층과 노인은 사회문제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 노인들이 많아져서 선거에서 청년층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
  - 청년층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둔다
  -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16개국의 태도 1문항** (최유석, 2016)
  - 정부는 노인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 **한국은 높은 노인차별적 태도, 낮은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높은 세대갈등수준. 한국의 세대갈등은 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등 기회구조의 불균등한 배분 등에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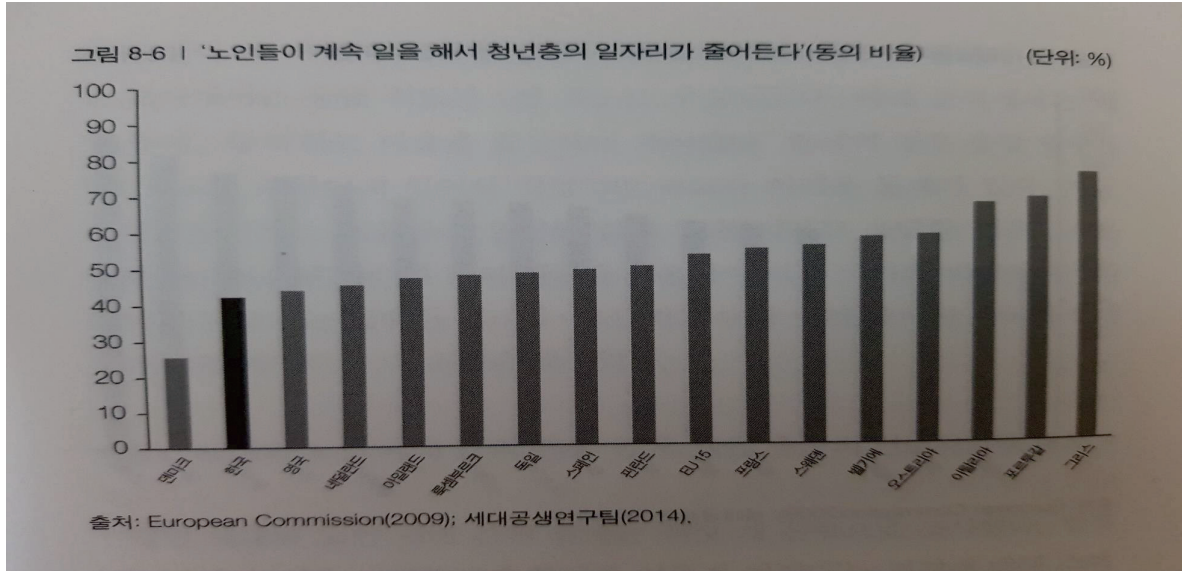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청년층과 노년층은 사회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 한국의 동의 비율이 낮음. 스웨덴, 그리스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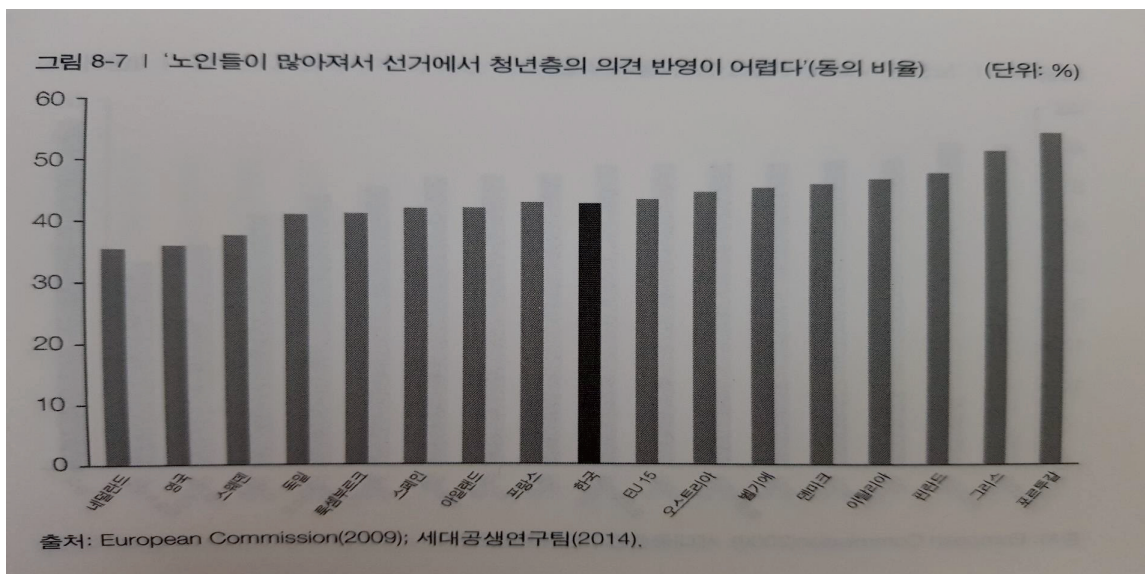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노년층이 계속 일을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 한국의 동의 비율이 낮음.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높음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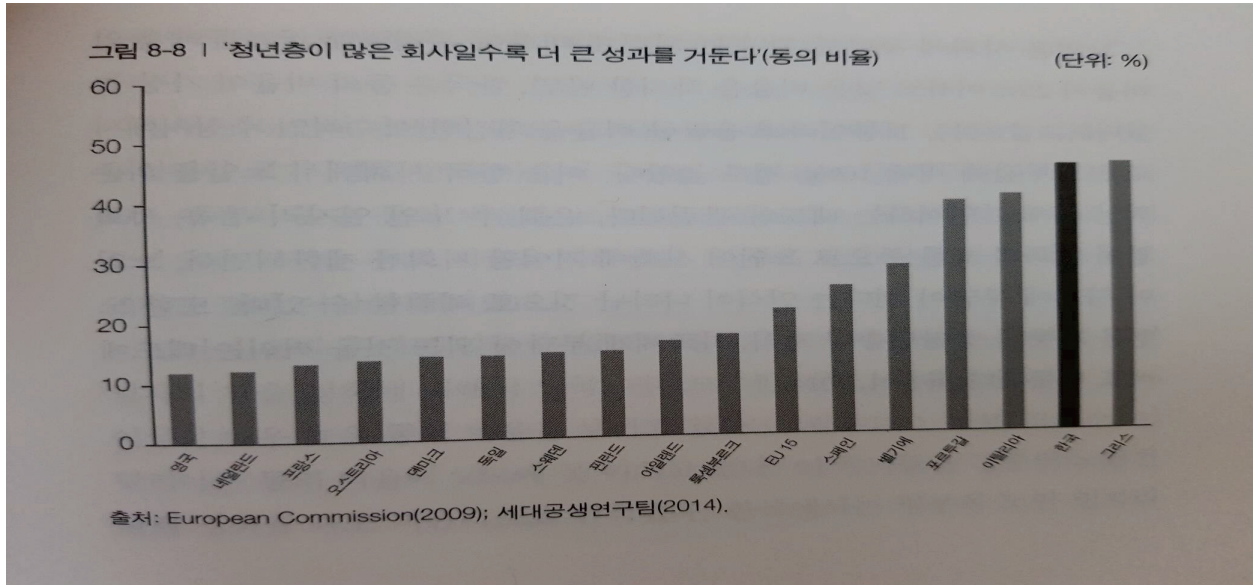
- 노인들이 많아져서 선거에서 청년층의 의견반영이 어렵다
  - 한국도 상대적 동의 높음.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높음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청년층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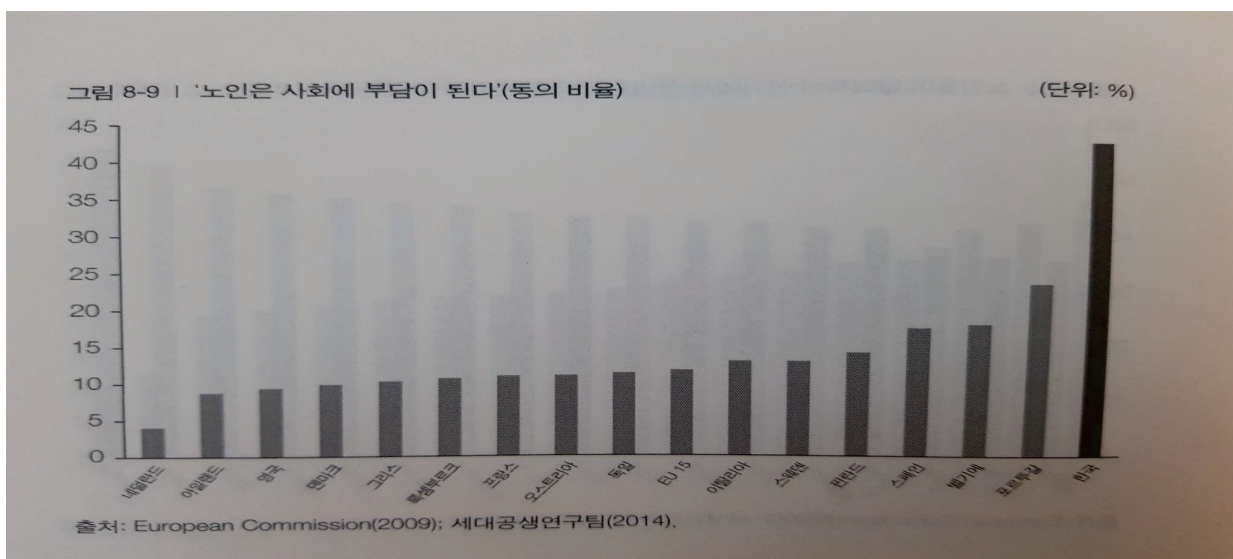
- 한국 동의 그리스 다음으로 높음. 이태리, 포르투갈 높음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노인층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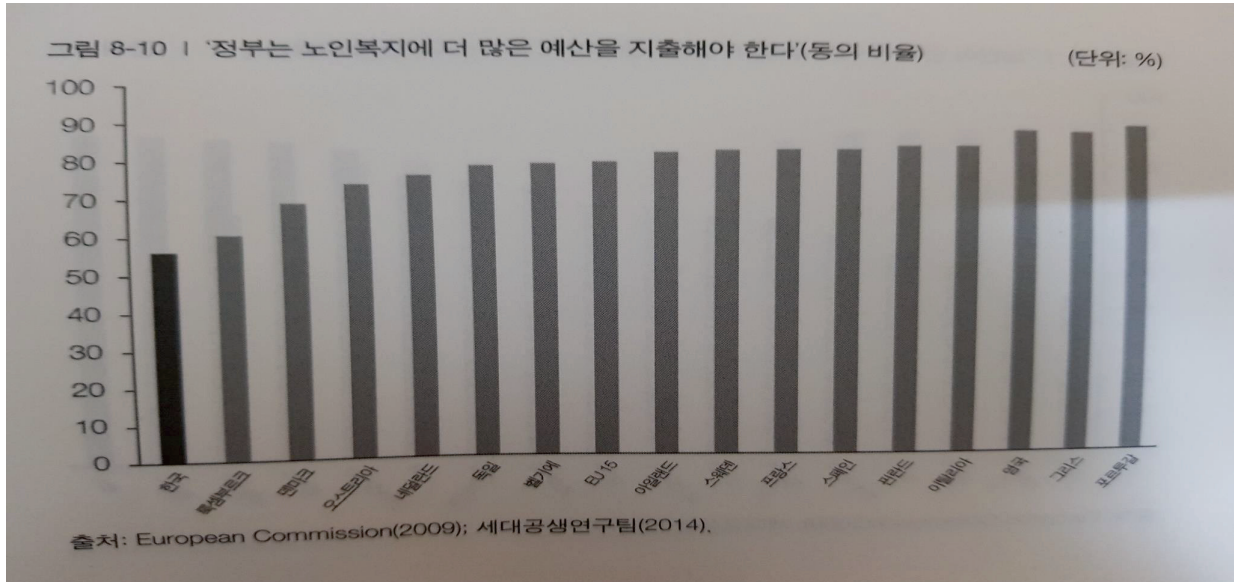
- 한국은 45%수준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 3. 세대간 노인차별 태도

• 정부는 노인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 한국은 가장 낮은 동의 보임



### 4. 세대갈등과 연령차별현상 분석의 문제점

- 1) 정치적 측면
  - 경제가 어려울 때 젊은 세대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노인세대는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경험
- 2) 경제적 측면
  -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인세대도 어려움
- 3) 복지적 측면
  - 복지제도가 노인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만 대상이 아니라 가족부담경감도 목적
- 4) 가족내 세대관계
  - 노인들이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손자녀 돌봄 제공
  - 가족이 없는 노인도 자원봉사 참여 통해 타인 도움



## 4. 세대갈등과 연령차별현상 분석의 문제점

- **Intergenerational fairness(justice) index(indicator) 문제점**
  - 세대간 사회지출분배의 양상이 어떠한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아동 및 청년세대의 재정적인 부담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척도
  - 노인에 비해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정부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간 정의가 잘 구현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음
  - 각국이 처한 주요 정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 측정방법 모호함
- 한국은 아직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보다 노인의 빈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유석, 2016)



## 5. 결론

- 세대통합을 통해 살펴본 노인차별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됨
  - European Commission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노인차별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세대갈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세대갈등이 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함. 또한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세대갈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함
- 한 세대가 얻는 이익은 다른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세대는 경쟁하기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 따라서 세대공존, 세대통합의 시각이 노인차별, 세대갈등의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참고문헌

- 구자숙·김명연·한준 (2000). 기업조직에서의 세대격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3), 1-19.
- 국가인권위원회 (2012). 보고서
-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10-34.
- 전상진 (2018). 세대게임. 문학과 지성사
- 최유석 (2016). 세대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한울
- 최원기 (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학보, 1(1), 85-103.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식 조사
- 한정란 외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Bentsen, V.L. & Oyama, P.S. (200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trengthening economic and social ties*. New York: United Nations Headquarters.
- Daniel Schraad-Tischler, Najim Azahaf (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ies; A cross national comparisons of 29 OECE countries.
- Kohli, M. (1985). 최유석 (2016)에서 인용.
- Mannheim, K. (1952). On the nature of economic ambition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social education of ma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p. 230-275.



## 감사합니다

*Thank You*

*Chung ID*





## 노인혐오와 노인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송 오 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





# 노인혐오와 노인인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송오영

## I.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체험하고 있는 사회임.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노인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임

그동안 위원회는 국내 법령·정책·제도·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함

특히 지난 9월에는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원영희 외, 2017)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3개 분야 20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노인학대 및 빈곤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과 자살문제 뿐만 아니라, 학대, 건강, 돌봄 문제 및 사회참여 제한 등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가 제기됨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인과 청년 간 세대갈등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노인혐오 현상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혐오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것으로 생각됨

## II. 세대통합 등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

세대통합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제인권기준은 다음과 같음

먼저 1948년 유엔에서 발표된 노인권리선언(Declaration of Old Age Rights)은 ‘존경받을 권리(right to respect)’를 통해, 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존경을 받고 배려되어야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함

1982년 채택된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권고 49 및 50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정에 고령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며, 이는 고령화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현재 세대가 고령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권고 50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정부, 민간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노력할 것을 강조함

1991년 제정된 노인을 위한 UN원칙은 ‘참여’ 분야에서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함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2002년 발표된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PA)은 사회 발전을 위해 가정, 세대 간 상호의존,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Ⅲ. 노인혐오 및 세대갈등에 대한 위원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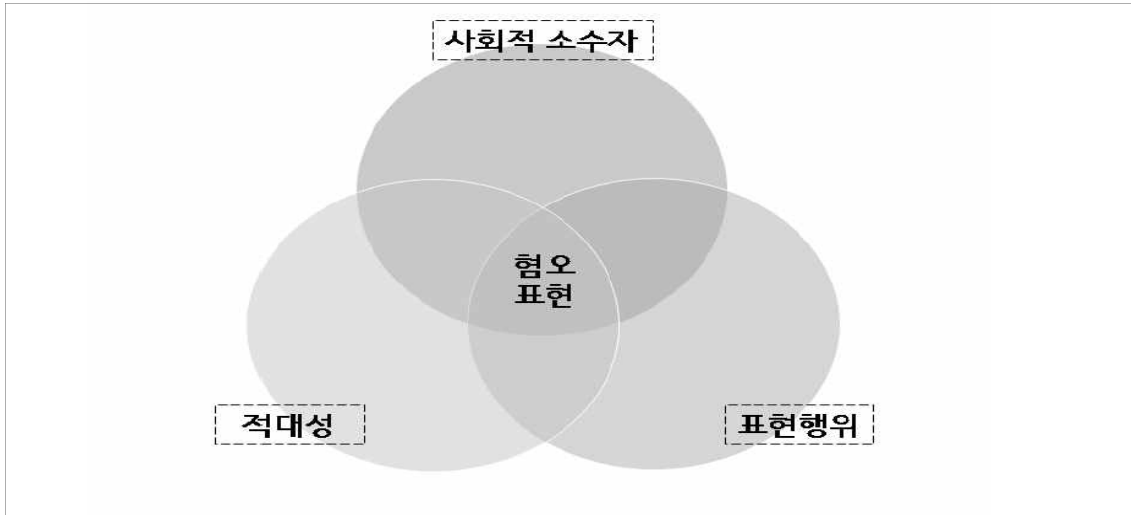
#### 1. 혐오표현이란?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홍성수)에 따르면,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약 2010년 경 부터이며, 반(反) 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이후 2012년 일간베스트(이른바 ‘일베’) 등장을 통해 혐오표현이 인터넷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왔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와 여성혐오, 남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증가하였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가 대상이며, 적대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표현행위를 뜻함. 다시 말해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함

여기에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포함됨



그런데 이러한 혐오표현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실정임

과거부터 사용되던 ‘노인네’, ‘꼰대’ 라는 단어의 수준을 넘어, 노인이란 단어 뒤에 벌레 충(蟲)자를 붙여 ‘노인충’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뜻의 ‘틀딱충’, 시끄럽게 떠드는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한 ‘할매미’, 나라에서 주는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연금충’ 이라고 비하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해 청·장년층은 이유 있는 혐오라고 주장함. 인터넷 공간이나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해 지하철에서 술을 마시는 등산객, 임신부 좌석이나 노약자 좌석을 둘러싼 논쟁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 혐오는 이유가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함

노인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사회 발전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까지 급속하게 진행되어 세대갈등과 노인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인혐오가 심각해질 경우 노키즈존(No Kids Zone) 현상과 같이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노인혐오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니나, 혐오표현은 주요 표적 집단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존감 하락 등을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혐오표현 피해 경험에 비해 가해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이 하는 표현이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음

이러한 점에서 노인혐오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특히 우리 위원회는 노인혐오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이어 2018년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최영애 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혐오 문제를 전담할 대응팀을 2019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에 있음

## 2.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중 세대갈등 관련 내용

### 가. 주요 현황

2017년 사회통합 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7)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6년 56.5%에서 2017년 62.4%로 크게 증가함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58.3%로서 2015년 45.6%에 비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대는 127.8%인데 반해, 60대는 63.9%, 70대 이상은 36.9%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17년 인권위의 노인인권 실태조사(원영희 외, 2017)에 따르면, 노인의 40.4%가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노인, 1인 가구, 학력이 높은 경우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청·장년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5%로 다른 응답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청·장년과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노인은 44.3%로 나타났음. 특히 노인의 67.6%는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청·장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및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이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질문에 대해 청·장년은 세대 간 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90.0%, 노인과 청·장년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7.6%로 나타남. 아울러 80.4%는 노인과 청·장년간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 및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또한 청·장년의 55.4%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77.8%가 동의하였음

#### 나.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당사자 실태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6개 영역 16개 세부영역 중 ‘세대교류 및 소통 증진’을 우선 해결이 필요한 3순위의 과제로 선정함 있음

먼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고령사회에서 노인인권 증진 및 노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인당사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노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위원회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10. 2. 노인의 날 기념 위원장 성명을 통해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였음

노인인권보고서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과 통합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세대갈등은 교육을 통해 세대 상호간 이해와 공감, 그리고 협조 관계 구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함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과 비노인 세대 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제도나 환경이 충분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대공동체 축제, 문화 및 교육 행사 프로그램, 가족 단위의 활동 프로그램 등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2008년부터 세대 간 교류프로그램(크라이사우 이니셔티브협회)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세대의 지혜와 신세대의 미래지향적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만남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아울러 보고서는 세대 별로 정보전달 채널이 상이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에 청년과 노인세대의 비례대표를 할당하거나 세대통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또한 세대 간 정보격차가 심화된다면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들이 다양한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습득 및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됨

#### IV.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세대와 청·장년세대 간 이해 부족과 갈등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혐오표현 등을 통해 노인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혐오 문제는 결국 차별과 배제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고,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발제해주신 두 분께 질문이 있음.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를 예방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여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땅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어느 부서(기관)이 주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인권위가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지원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음

아울러 정순돌 교수님께는, 한국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도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했고,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개인주의 등 서구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함

본 토론문 자료는 개인이 작성한 글로서,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과 진단

전 용 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 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과 진단

-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 “노인혐오”라는 이름의 부당한 증오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중략)...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중략)... 모로 누워 칼잡을 자야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 C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중략)...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얼마 전 신문에 기고한 혐로(嫌老)관련 칼럼 서두에 인용한 글귀이다.

칼잡을 자야하는 좁은 공간, 제공되지 않는 냉방시설로 인한 무더위.

비인권적인 교도행정이 가져온 증오는 교도소 당국이 아닌 내 옆자리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료들 향하고 있다.

저자는 이 증오를 ‘부당한 증오’라고 지적한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피해자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야말로 부당한 증오이다.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지칭할 때 ‘뜰딱충(蟲), 할매미, 연금충(蟲), 노인충(蟲).’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SNS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이런 비하 발언을 사용한다고 한다.

노인들은 왜 젊은 세대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가?

각종 뉴스나 SNS에 돌아다니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노인들은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이야기 하며, 설사 임신부라 하더라도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존재이고, 끈대 같은 모습으로 젊은 사람들을 억박지른다.

편협한 정치의식으로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며, 거짓뉴스에 쉽게 넘어가는가 하면 이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는 존재이며,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쯤 되면 인간이 관계 속에서 가지는 최소한의 신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처럼 여겨진다.

이들이 노인혐오의 이유로 설명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세대 간 갈등은 존재한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끈대스러움에 대해 분노하기도 한다.

지금 노인들이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가졌던 선배세대에 대한 불만과 다르지 않으며, 불만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로부터 받을 지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가진 노인혐오의 원인을 오히려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시대의 노인들은 폐지를 찾아 새벽길을 헤매고 다니며(심지어 그 과정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공원 한 구석에서 시간보내기로 소일하고 있거나, 약해진 몸을 위탁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찾아다니고 있다.

가족과 지인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경비나 청소용역 같은 일자리라도 구하게 되면 인격적인 비난에 노출되기도 한다.

단순화 하면 노인들의 모습은 남루하며, 사회 적응이 어렵고, 노인 존재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마음껏 노인을 혐오해도 되는 이유로 둔갑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카롤린 엠케는 ‘증오와 폭력을 고찰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오가 마치 존경심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진짜 감정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방법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가정해 보자

만약 노인들에게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건강관리에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건강수당을 지급한다.

노인들의 평생교육이나 여가활동을 사회문제 예방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배시민<sup>2)</sup>으로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으로써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이들도 사회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목표로 구체화 하고, 이를 위한 각종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을 지역계획에 반영한다면 어떨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도 우리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혐오대상이 되며 벌레라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것인가?

거듭 강조하지만 혐오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감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고령사회가 오는 것을 지옥의 문이라도 열리는 듯 부정적으로 묘사해 왔다.

노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정책보다는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여 사회갈등을 키워왔다.

고령사회가 도래한다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고령사회를 맞이 했

1) 혐오사회(pp.26~27)

2) 선배시민(senior citizen)은 노인이나 어르신보다는 시민으로써의 지위를 강조하는 철학적 담론이다.

으며 심지어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기점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감고 있다.

결국 노인혐오는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의 외면으로 만들어진 세대간 갈등의 한단면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된다.

### ‘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sup>3)</sup>

노인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우리 사회 노인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관심과 대안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따라서 노인혐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혐오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고령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다.

고령사회를 예견하기는 했지만 고령사회를 대비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전무했다.

혐오는 대상에 대한 모호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노인과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이 과정 자체가 세대통합을 위한 소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의된 구성원들의 동의를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면 노인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사회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는 무사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 한다.

악(惡)은 ‘특별히 악한 자가 타인에 대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악행’이 아니라 ‘평범한 누구라도 사유하지 않게 되면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노인은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인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흔히 말하듯이 대다수는 선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타인을 혐오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혐오행위는 나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노인 혐오를 비롯한 모든 혐오행위와 보편적 인권의 문제에 접근하는 대단히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셋째, 세대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세대통합과 관련된 노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3) 앞의책(p.10)



먼저 노인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인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후세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두 세대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다.

두 세대가 특정한 실천 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나 환경개선활동을 벌이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노인세대의 사회단절을 막기 위한 정보접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 사용이나 휴대폰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활동들은 현재 매우 활발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일시에 큰 사회적 파장이나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한다. 지속적으로 세대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살펴본 여러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세대통합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내 관련복지시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이 필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령 신체적인 건강함과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인프라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전국 8개 권역의 노인복지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배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선배시민대학’ 노인들이 시민사회의 선배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체가 되기 위해 교육받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평가받고 있다.

노인들 스스로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하는 모습은 드라마틱하기 까지 했다. 그야말로 노인네가 어르신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노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만 있다면 노인들을 위한 매우 다양한 사회참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노인혐오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혐오현상은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혐오행위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앞으로의 어느 때 보다 더 좋은 시기이다. 바로 지금 말이다.

# [ 2부 ]

세대통합 전략 방안 모색



## 세대갈등과 통합의 미시적 기초: 젠더와 가족

박 경 속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세대갈등과 통합의 미시적 기초: 젠더와 가족<sup>1)</sup>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가?

한국사회에는 지금 다양한 타자에 대한 혐오발화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북세력에 대한 혐오, 본인의 무능을 사회 문제로 전가하는 한심한 청년남녀에 대한 혐오, 열등한 자기 주제를 모르며 눈만 높은 여성들에 대한 혐오,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도 세상을 훈계하려는 노인에 대한 혐오, 남의 나라에 와서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못나고 찌질이 공상인 비정규직, 알바인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그리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런 혐오에 대한 혐오.

혐오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들고 날면서, 환상의 복합적 층위를 넘나들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환상의 세계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재강화한다. 여성혐오, 노인의 젊은이에 대한 혐오, 혹은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공통된 현실세계에서는 가부장적 남성성, 국가/민족,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지배와 배제의 정치가 작용하고 있다(나병철, 2016). 이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배제와 불평등의 정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또한 매우 중층적이다. 중층적인 차별의 현실에서 촉발된 고통과 자기 모순을 망각하게 하고 차별과 불평등의 정치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왜곡 작용이 일어난다. 이데올로기적 왜곡 작용에서 도덕적, 이성적으로 진보한 자기 정체성과 마땅히 추방되어야 하는 혐오의 대상이 구별된다. 현실에서의 자기 균열과 자기정체성의 위기와 소외의 근원을 타자에게 투사하여 그 균열을 봉합하는 장치가 작용한다. 혐오의 대상을 통해 자기 균열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불평등의 방어기제일 수 있다.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에서 고통을 받는 나와 사회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혐오인식과 발화의 근저에 작용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그것을 지속시키고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는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의식 작용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이 클 수 있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들고 날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연출되고 있다. 노인은 끈대로서 그려지고, 대화가 불가능한, 합리적인 소통보다 울화와 폭력이 더 가까운 존재, 공중 예의가 없으면서 오히려 젊은이를 교육시키려는 존재, 공적 장소에서 만나도 섞이고 싶지 않은 무시하고 싶은 존재, 사회에 쓸모가 없고 부담만 주는 존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자

1) 이 글은 이미 출간된 줄고(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공저, 다산출판; 도덕, 정치, 경제적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 2007, 19/3;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가족의 탄생과 중년의 생애사적 자취, 2017, 아시아리뷰 6/2)와 구두발표논문(Precarious Korean elders: The Effects of Family Change and Segmentation of Labor-Welfare on Poverty Risk and Inequality of Korean Elderly People, ISA RC28 Seoul symposium.)내용의 일부를 발표주제에 맞추어 인용, 편집하였습니다.

기를 내려 놓지 못하고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젊음을 모방하려는 존재라는 생각들이 사회적 견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온라인 장소를 중심으로 발화되고 있다.

혐오가 반대 방향으로도 발화된다. 남성가부장성이 무너지는 데에 대한 저항의 심리가 노세대의 집단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 정권, 성적 소수자, 노동자 시위에 저항하는 택시기 집회, 공원, 경로당 등 시니어 집단이 모여 있는 공간은 남성의 비중이 크다. 기존의 권위 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누르려한다.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불순세력을 정화해야 하는 투사로 자신을 평가한다. 노인들의 정치화는 자기 소외를 투사한다. 소외, 무기력, 무능력, 자기비하의 감정에서 벗어나 집단 권력을 욕망한다.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화는 인권 감수성이 큰 사회에서는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이다(문연주, 2014; 김현경 외, 2012; 이준일, 2014). 차별적 행위가 표현되는 방식이나 정도는 차별과 불평등 기제의 균열과 위기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불온한 타자로부터 위협받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식될 때 타자를 무시하거나 편견을 조장하고,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수준으로도 타자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래도 현실의 질서에 위협되는 타자를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질적 자원들과 관계들로부터 봉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도 타자의 존재가 위협이 된다면 더 노골적인 차별행위인 폭력적인 행위와 발화가 쏟아진다.

노인에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혐오와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그리고 노인이 다시 이 사회에 쏟아 내는 울분과 분노, 혐오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연령통합과 세대공존을 외쳐보아 혐오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과 이를 극복하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노년의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세대관계, 특히 가족과 젠더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 세대갈등의 젠더, 가족 차원

노인에 대한 혐오와 심각한 세대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요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생산성과 젊음을 중시하는 문화, 제도, 과학기술 환경으로부터의 배제, 소득과 복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 국가, 민족,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는 지형이 세대이다. 근대사회의 분화과정은 경제적 이해, 권력관계, 가치지향, 생활양식에서 세대차이가 불거지고 갈등이 부각된다(박경숙외, 2013: 1-7). 각 세대는 상이한 시대적 조건에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는 특정 세대에 대한 이런 저런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우리 나라에서 호명되는 세대는 광장세대, 정보화세대, X세대, 신세대, 삼팔육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 냉전세대 등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변동의 밀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호명된 세대들이 얼마나 고유한 집단정체성을 공유하는지, 그 정체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박재홍, 2005; 전상진, 2004; 홍덕률, 2003; 박경숙 외, 2013). 아마도 한국사회처럼 급속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세상이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좀 더 열려 있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열려있고 관용하는 태도가 모든 세대에게 부족

하지 않을까. 세대를 넘어서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 배워야하지 않을까. 열린 세대 관점은 세대의식이 결정화된 총체라기 보다는 새롭게 발현되고 구성되는 속성 때문에 중요하다. 세대를 지나치게 거시사회문화적인 조건에 구속된 실재로 파악하거나 생물학적 토대나 계량적 도구로 정확하게 조작하다고 확신하거나, 세대 현상을 계급, 정치, 젠더, 경제와 같은 지배 논리와 독립된 객관적 실재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세대의 허구성을 잘 표현한다(박경숙 외, 2013: 16). 중요한 것은 세대관계의 구성성, 어떻게 집합적인 경험이 기억되고, 상호작용하고,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세대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해체할 수 있는 접근일 수 있다. 세대관계의 구성적 특성은 집합적인 경험이 기억되고, 정치, 경제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특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세대관계의 구성적 특성을 젠더와 가족 차원에서 살펴보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세대는 가족수준과 보다 거시적 사회수준인 경제, 문화, 정치 차원과 구분되고 또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가족중심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는 사회적 세대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이전은 교육, 노동, 소득, 자산 등의 경제적 재화와 기회가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부양을 둘러싼 젠더, 세대간 가족갈등이 경제, 정치적인 사회 현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인 가장 강한 소속감,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내지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 안에서 세대관계는 부모-자식, 조부모-부모-자식의 축에서 부양관계, 가족관, 자원, 권력 등을 둘러싸고 구성된다. 젠더관계 역시 가족의 권력, 부양관계를 중요하게 주조하면서 변화되었다.

## 근대가족의 위기와 세대갈등

가족의식이 강하고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은 현재 한국인의 심성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계층끼리 결혼을 하는 풍습, 가족 지위를 대를 이어 높이려는 열망, 남녀는 구분된다는 의식,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 가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 그리고 기러기 아버지, 교육 주부, 홀로 사는 노인, 비혼의 삶, 모두에서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에 있음을 본다.

현재 한국인의 가족이념은 과거의 유교적 가치, 핵가족의 이념, 도구적이고 서정적인 이념 등 서로 상충하는 이념들이 혼재하고 있다(조혜정, 1985; 장경섭, 2009). 이런 혼재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편으로 개성을 중시하고 남녀 동등하고 서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일상의 또래 문화에서 서열 문화를 즐기고, 가족감정이 강하고,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도 강하게 보여진다. 또한 압축적 사회구성이 내포한 부정합과 갈등을 상쇄하면서 통합하는 힘은 다름 아닌, 발전과 지위 이동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리고 이 열망에 기초하여 상충된 이해와 관념의 갈등적인 힘을 통합하고 있었던 미시적 기초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가족중심성의 내적인 균열이 모든 세대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만혼화 경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에서는 성별화된 노동과 가족생활, 도구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부담인식이 크다. 노년에 혼자 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장된 노년에 대한 가족부양의 부담인식도 매우 크다.

필자는 가족관계의 위기적 상황, 가족부양의 긴장, 그리고 그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한국



의 근대가족의 내적인 모순의 성격에서 비롯함을 강조하고 싶다.<sup>2)</sup> 한국의 근대가족은 가부장제로 논리로 융합된 확대, 부부가족의 특성을 가진다. 확대가족과 부부가족의 이념은 젠더, 세대관계에서 상충되는 부분도 크지만 식민지, 군사권위주의 산업화, 시장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세대, 젠더관계의 권력관계의 변형 속에서 그 이념이 혼용되어 한국인의 가족 이념과 삶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이념이 강조하는 도구성, 세습성, 성별화의 원리는 변화된 경제, 정치, 문화 조건에서 내외적으로 상당한 긴장과 균열에 이르게 되었다. 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은 내적으로 세대간, 젠더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변화되는 경제, 정치적 조건 속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근대가족의 내적인 모순 속에서 세대갈등이 부상하였다.

### 효의 이념과 실재, 가족내 젠더, 세대간 정치

근대에서 가족이 강하게 조직된 데에는 근대의 중요한 주체로서 개인보다 가족, 국가, 민족의 경계가 더 강하게 정립되었던 맥락이 존재한다. 제국과 식민 권력에 유린되면서도 그 권력의 토대가 되는 문명적 장치들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한 개혁가들은 서양에 버금가는 강력한 민족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근대주의 세력은 국가와 국민사이, 그리고 사적인 관계에서 가부장제적인 원리에 기초한 국가 중심의 사회를 추구하였다(川島武宣, 1950). 강력한 민족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가족은 국민과 민족 성원을 확증하는 민족 국가의 기초 단위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서정적 가족관계와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를 상징하는 핵가족 이념은 문명과 젠더해방에 대한 동경의 세력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성의 역학관계에서 억압되고 변형되면서 그 사회적 영향이 변화되었다.

조선시대 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조선조 중기 전후로 가족, 친족 제도상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논의된다. 최재석(2002)과 한남제(1997), 이숙인(2005) 등은 이러한 변화를 재산과 제사의 상속, 양자제도, 족보, 혼인 거주규칙 등에서 비부계적 요소가 약화되고 부계적 요소가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sup> 이들 학자들은 효는 단순히 혈연이나 생물학적 차원에 기초한 보편적 감정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조직법상에서 강조된 도덕 원리라고 강조한다. 부계친의 조직화는 도덕적 헤게모니를 유교적 이념에서 구하였다. 제사, 재산과 노동력, 호주 등에서 가부장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와 친족에 대한 親親의 도덕 원리로서 강조되었다.<sup>4)</sup> 이숙인(2005)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가족윤리는 父義, 母慈, 兄友, 弟恭, 子孝 등과 같이 벗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부계친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골격은 일제시기, 해방이후 미군정, 그리고 1958년 제정된

- 
- 2) 한국의 근대가족의 독특성으로서 가부장제의 논리로 혼용된 직계, 부부가족에 대해서는 박경숙 2017,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아시아리뷰 6/2 참조.
  - 3) 최재석(2002)는 조선시대의 가족형태를 보면 직계확대가족보다 부부가족이 월등히 많다고 지적한다. 한남제(1997)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직계가족이 증가하는 추이가 확인된다. 18세기에는 양반과 상민의 차이가 컸는데, 19세기 초반에는 상민, 천민에도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재석은 직계가족의 증가를 유교적 가체체계의 확대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 4)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벗을 위해 죽은 것도 허락되지 않고 사사로이 재산을 가질 수도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로이 재물을 가질 수 없으며 사사로이 모을 수 없으며 사사로이 기물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줄 수도 없다.' (禮記, 이숙인 2005, 412 쪽에서 인용)

가족법에도 유지되었다.<sup>5)</sup> 이후 일련의 가족법 개정은 가족관계 내 어머니, 딸, 아내의 권리증진을 위한 가족제도의 개정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길항작용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동진(2002)은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을 기점으로 한국의 가족제도는 과거의 혈연중심 직계 가족제도에서 부부 중심 가족제도로 단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약화된 결과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변화가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침내 1998년에는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 3월에는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인1적제의 새로운 등록제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가족 제도 변화는 가족관계의 도덕과 권력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동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동안의 가족 변화의 역사는 가족 내 평등한 관계를 향한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와 모의 권리가 보다 평등한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 여성의 가족 지위가 강화되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토대가 약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개별 가족과 사회에서 커다란 알력과 갈등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이었다(박경숙, 2007).

효의식의 약화는 가족내 권력관계가 변화된 중요한 지표이다. 여성의 가정 내의 영향력의 증가는 효의 이념을 약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부계가족제도에서 자녀의 헌신은 며느리의 노동과 헌신에 의존하는데, 여성들의 가족 내 영향력의 증대는 더 이상 헌신을 강제당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또 효 이념이 점차적으로 그 권력 토대를 상실해 가면서 권력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도덕 가치로 연출된다. 노부모와 자녀 모두 효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이를 기대하거나 실행하는데 심적 부담을 크게 가지는 심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 발전주의 가족이념

한국에서 가족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나 기업의 영향력도 존재하지만 이들 권력으로부터 가족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졌던 역사적 맥락의 영향도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제국주의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가족 구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정도가 강하였다고 여겨진다. 패전이후에도 전시체제의 유산이라고도 지적되는 유사 가부장적 노사관계에서 남성 노동자는 기업에 조직되었고 그 헌신의 대가로 그와 가족의 복리 후생을 보장받았다(上野千鶴子, 1990).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후견-헌신의 관계로 조직화되었고 젠더관계도 노동과 가족 역할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여성의 주부화 현상이 한동안 안정화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산업화 초기 자본이 취약한 이유도 컸겠지만, 노동자가 자본에 유기적으로 포섭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족이 노동력 재생산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부부 중심의 서정적 가족관계 및 젠더 분화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도 1970년대 까지도 상당히 취약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960년대 이후 가족은 중요한 경제적 단위로 빠르게 조직되었다. 국가는 자본축적과 발

5) 남한의 가족법의 연원은 1912년 조선총독부 제령인 '조선민사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 조선민사령에서 민법의 친족과 상속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미군정청 법령 제21호'로서 일제의 조선민사령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켰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 체결된 '한미제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 제11조'로서 당시의 법률, 법령 및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http://synnic.com.ne.kr/SN.root.htm>)

전을 위해 한편으로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가족을 경제단위로 바꾸는 데 계몽,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잘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은 발전의 주체로서 가족을 탈바꿈하는 운동이었고, 전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사회 발전이 강조된 초기에는 가족이 국가의 계몽에 선도되는 위치에 있었다면, 1970년대 이후 가족은 더욱 자율적으로 발전의 주체로서 기능하였다. 소자녀 가족 이념이 일반화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확장되었고, 개별 가족의 자산 축적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족애와 가족의 많은 기능을 국가 복지의 취약성이나 전통의 요인, 혹은 가족 외부의 국가, 경제 권력의 영향으로 일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국가 복지의 취약성으로 가족의 복지 기능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가족을 계몽하고 투자와 부양의 기능을 강화한 부분도 크지만, 이것만으로 맹목적으로까지 보이는 가족애와 가족경쟁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가족 중심의 심리와 복합적인 가족 기능을 전통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족 내 권력관계의 상당한 변화와 갈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가족은 국가와 경제 권력에 의해 유기적으로 기획되고 통치된 것이 아니라, 이들 권력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가족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직, 국가, 시민사회의 조직방식에도 개입하였다. 가족은 사적영역을 지배하면서도 가족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 자원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갈등적 성별화와 세대갈등

한국에서 근대적 성별분업과 주부의 탄생은 전통시대와 근대가 시작되었던 시기에 강화된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지난한 저항으로 획득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한 이후 법제화된 가족이념은 전통, 식민지 근대성, 국가권위주의체제의 영향 속에서 가부장의 원리로 중층화되었다(양현아, 2011). 이 안에서 여성의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심각하게 차별받았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상당한 노력이 가족제도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족제도의 개편을 반대한 입장은, 미풍양속의 전통을 고집하였고,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 기강을 해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 질서는 전통이고 전통은 변화될 수 없다는 논리에 맞서서 가족 영역을 둘러싼 정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권을 확립하려는 민주화 운동과 비견될만한 사적인 권력관계를 바꾸는 커다란 운동이었다. 일련의 지속된 가족법 개혁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법제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논의가 빈번해진 것도 젠더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운동이 가족 안에서는 가열차게 이루어졌지만, 가족 밖에서는 제한되었다. 가족 내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족 밖에서의 여성 이슈를 함께 수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크게 개선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여성을 훨씬 더 가족에 강하게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 같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고, 가족내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고, 가족 외부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제약되는 상황은 젠더관계가 성역할 분리 이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과거와는 다르게 남녀 평등하게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가족에 일치시키면서, 가족은 더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기획된다. 자신들을 가족으로 내모는 국가, 자본, 남성 일반에 저항하기 보다는 그들이 놓여진 가족을 자신의 지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성차별의 지배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가족은 젠더관계에서 보수적이고 불평등한 뿌리가 깊다. 이렇게 발전주의와 성역할분리 이념과 논리

가 결합하여 가족 이해를 극대화하는 가족주의 행태가 있는 것이다.

### 가족주의의 모순과 젠더갈등, 세대갈등

그러나 가족주의가 강화될수록 내적 모순과 긴장도 심화되었다. 인적 투자, 자산축적 등 가족의 이해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였지만 점차 경제적 기회구조와 갭이 커지면서 가족주의의 위기도 심화되었다. 외환 위기를 겪고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개별가족은 채테크에 열성적이었다. 저금리, 부동산 경기에 대한 낙관 속에서 부동산 투기는 심화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심각한 가계 부채 상황으로 이르렀다.

가족이해를 극대화하는 행위 전략은 친밀성의 공간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남자는 능력 경쟁의 정글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위가 결정된다. 높은 지위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여성도 예외가 아니다. 척박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평등권을 주장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능력-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신데렐라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매력 있는 여성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세술로 여기는 듯하다. 한류를 이끌고 있는 한국 문화의 이미지 대부분은 능력 있고 배려 있는 남성상과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의 꿈은 지구적으로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높을 대로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나 소득, 자산을 현실에서 찾을 가능성은 제한되고, 미래의 삶도 불확실해지는 과정에서 젊은 남녀의 결혼 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교육은 가족의 중심 역할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자녀 교육이 비용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가족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적 교육체계가 미비한 요인 이외에도 가족이해를 극대화하려는 욕망의 요인도 크다. 가정생활의 손익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역시 신중한 가족계획을 거쳐 세상에 돌도 없는 금지옥엽으로 태어나고 키워진다. 부모는 자식에게 넓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조기 교육에 힘쓴다. 특히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성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자녀의 교육 성공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크다. 헬리콥터 어머니, 교육엄마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엄마의 훈육 속에서 아동은 생애초기부터 경쟁의 문화에 단련되고,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진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학교, 사회 전체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쟁에 휩쓸린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 통합과 실존의 위기가 근원적인 이유일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의 지원 속에서 자녀들이 교육 성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교육경쟁은 인적능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청년 실업이 고질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고학력이 대중화된 조건에서, 고학력 자체만으로는 일자리를 장담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모의 자녀 지원시간은, 자녀가 독립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비례하여 길어져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가족의 기능이 자녀 부양에 집중되면서 노년의 삶도 상당한 긴장을 갖게 되었다. 운이 좋게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노부모는 자녀도 돌보고 자신의 노후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만, 많은 부모가 길어진 부모 역할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책임 의식 때문에 자식에 대한 헌신을 노년에까지 감내하거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

가족주의는 가족 성원간의 강한 연대에 기초한다. 그러나 가족의 외양적 성공을 위해 가족 관계가 도구화되고, 가족연대가 물질적 성공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결과 가족 긴장이 심화되기도 한다. 가족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와 남편, 학업과 취업 경쟁에 성공하지

못한 자녀와 엄마, 경제적 자원을 결핍한 노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는 국가나 커뮤니티, 직업 조직의 공동책임이 약한 이유도 크지만 가족이 스스로의 이해를 제동 걸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그리고 가족의 이해만 극대화하려는 한계 없는 가족중심주의가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위험을 양산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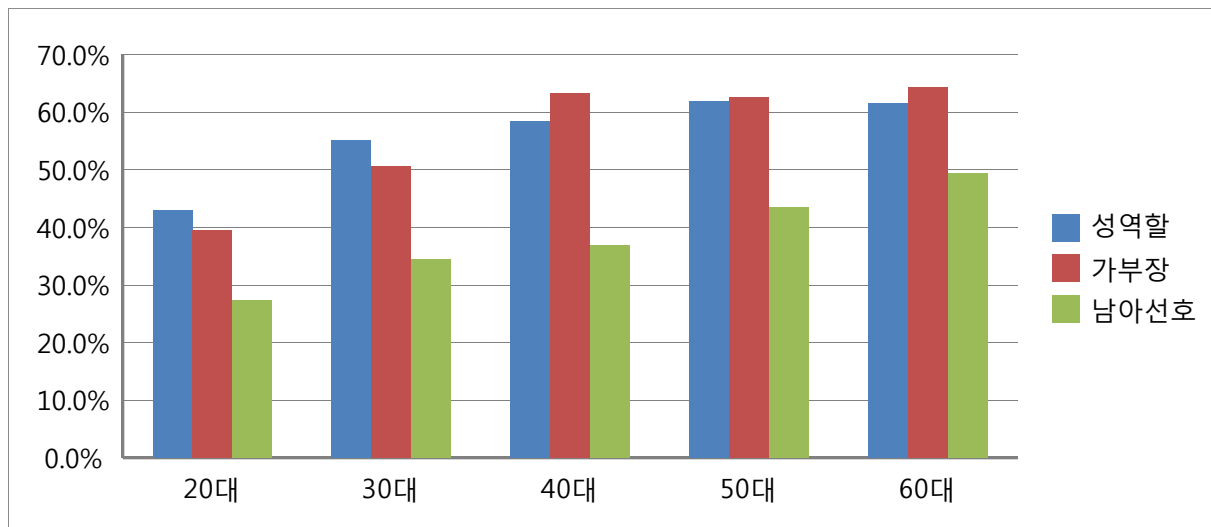
## 통계와 사례로 본 가족가치관의 차이와 세대갈등

### 1) 젠더의식과 세대갈등

가족 구조, 기능, 법적 지위와 가족 이념에서 가장 대립이 심하였고 커다랗게 변한 지점 중의 하나가 젠더 관계이다. 바깥 양반' 과 '안사람' 의 고정된 성적 역할, 남편의 유고 시 어머니도 만딸도 아닌 장남이 어리더라도 '가장' 이 되던 현실, 대를 이을 그 '가장' 을 낳기 위해 다섯이고 여섯이고 줄줄이 '실패작(딸)' 을 낳던 경우 등은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성 평등 의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과거의 고정관념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에 더 노출된 젊은 세대일수록 기성 세대와는 가치관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다음에서는 2012년 필자가 참여한 <세대 간 소통 및 화합 방안 마련 조사> 자료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성역할, 가부장권,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적 고정관념은 가족 부문에서 세대별 가장 큰 의식 차이를 보인 부문 중 하나였다(그림 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가정 내 의사가 서로 갈릴 때 가장(남편,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는 가부장 의식은 나이가 젊을수록 부정하는 태도가 강하게 보인다. 한편 “자녀를 하나만 갖는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 는 남아선호 사상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지배적인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아선호사상은 큰 폭으로 약화되었고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부장적 가치관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전통적인 성역할, 가부장의식, 남아선호 사상에 동의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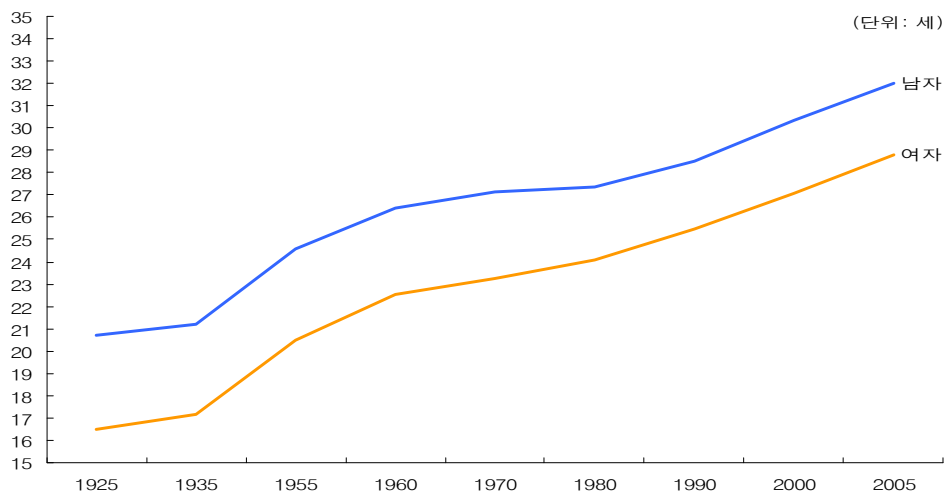
2012년 세대 간 소통과 화합 방안 조사에 기초한 결과이다. 남편이 할 일은 돈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 내 의사가 서로 같릴 때 가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자녀를 하나만 갖는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 문항에 동의한 비율을 가리킴. (박경숙 외, 갈등과 통합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63).

이와 같이 전 세대가 전통적인 성적 고정관념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성 세대와, 어릴 때부터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청년 층의 흡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 세대에서 성적인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20%가 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젠더, 세대 관계를 둘러싼 이러한 가치관의 상이함은 세대 간 갈등을 조성할 여지가 크다.

## 2) 결혼관의 세대차이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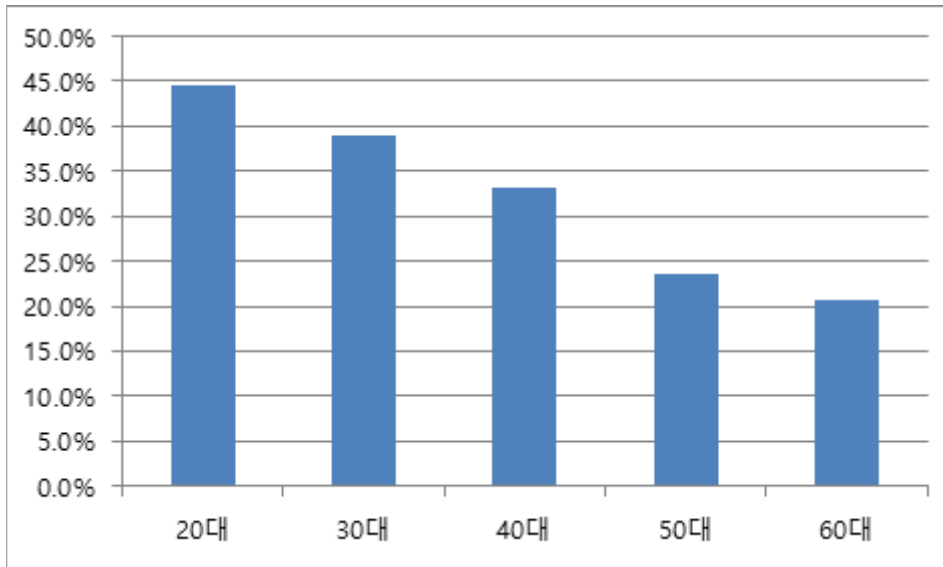
[그림 2] 초혼연령: 1925-20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처럼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큰 폭으로 늦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전 기간과는 구분된 사회 조건에서 청년기의 삶이 구성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또한 만혼화는 세대갈등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가족 긴장의 중요한 한 차원이다. 각 중 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 풍속과 관련된 볼멘 목소리들을 접한다. 직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삼포세대)의 표현처럼, 만혼화는 젊은 세대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이미지화된다.

[그림 3] ‘선택할 수 있다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에 동의하는 비율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70.

만혼화가 그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은 젊은 세대에게 적잖은 심리적 불만감을 수반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불확실성은 중장년 세대에게 자녀 성공 기대에 대한 좌절감과 부양 부담을 강화할 수도 있다. 2016년 인터뷰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인용할 수 있다. 그는 심각한 갱년기 증후를 겪었다. 신체적 리듬만이 아니라, 몸은 많이 쇠약해졌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배려심이 없고, 아들 둘은 엄마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대학, 취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엄마의 경제력에 의존하였다. 어렵게 큰 아들은 장가를 보냈지만, 신부, 신라의 조건 문제로 한바탕 집안 난리가 있었고, 둘째 아들은 임금이 적은 일자리는 회피하면서 실업상태에 있다가 엄마와 크게 갈등하였고 최근에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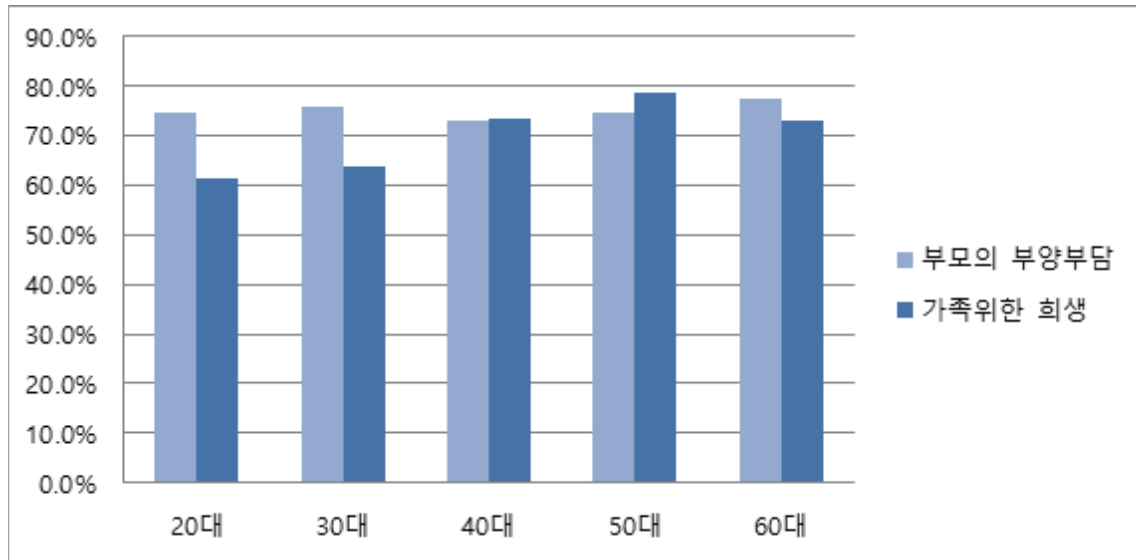
### 3) 연장된 부모 책임의 부담

한국은 무한 경쟁사회이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위험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영어 유치원과 대학 등록금 수준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의 ‘귀족적’인 코스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어학 연수와 대학원 교육, 취업이나 고시 준비 등 자녀가 20대 후반까지 웬만한 중산층이 아니면 대출 없이 감당하기 힘들다. 30대를 넘어서도 자녀의 결혼 비용과 집 마련, 손주 양육비까지 대주는 부모가 많고 본인의 노후대비는 먼 실정이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노부모 부양까지 자녀 된 도리로서 지고 있으니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40, 50대는 그야말로 등골이 휘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가족 부양에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데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부하된 가족 부양 기능을 감내하게 하는 심리적인 차원이 존재한다. ‘내가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모든 세대가 동의하는 비율이 컸다([그림 4]). 특히 가족 부양의 주된 역할을 하는 40대, 50대에서 가족을 위한 희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20대와 30대도 가족을 위한 희생엔 60%가

넘게 동의하고 있다.

[그림 4] 부모들의 가족 부양 부담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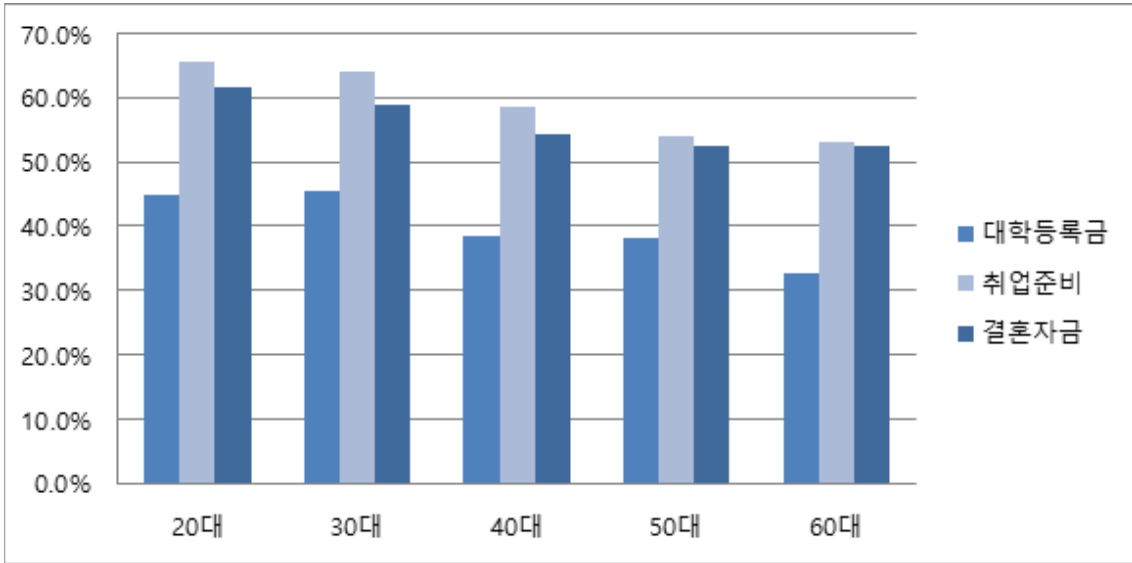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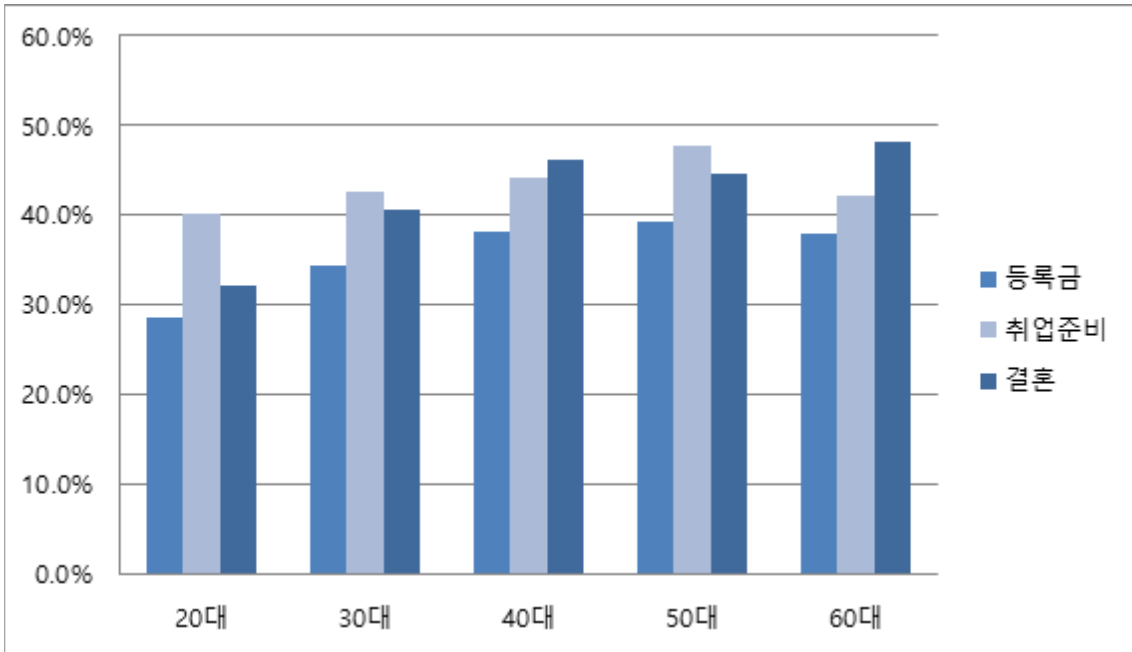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핵가족 관계에서 일반적일 수 있지만 한국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정도는 지나치다는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이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에 단순히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넘어 자녀의 대학등록금/취업준비/결혼자금을 위해 ‘부모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데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일반적이다. 반면, 취업준비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일반적이다. 이 상황만 보면, 자녀 부양에 대한 갈등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것 보다, 취업준비나 결혼준비까지 부모의 역할이 강제되는 경우 클 수 있다고 추측된다. 다른 한편 자녀보다 부모세대가 자녀 부양역할을 수용하는 태도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자녀 부양에 부모의 노후대비 자금을 희생해선 안 된다' 에 동의하는 비율



[그림 6] 자녀 부양 문제로 (크게+조금) 갈등을 경험한 비율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82.

확대가족이념과 부부가족 이념이 절충되어 구성된 매우 독특한 책임, 도덕성이 부모정체성이다. 확대가족 이념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강조. 대를 잇고 노후를 책임지는 자녀를 기대한다. 부부가족 이념에서는 자녀의 책임보다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대를 강조한다. 부부가족 이념에서 자녀는 훨씬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책임의식을 적게 가질 수 있다. 부모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노후부양, 대를 잇는 가치보다, 자녀의 성공과의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관념이 더 클 수 있다. 지위획득에 열망하면서 지위획득을 위한 가족의 연대가 강화된다.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존재 가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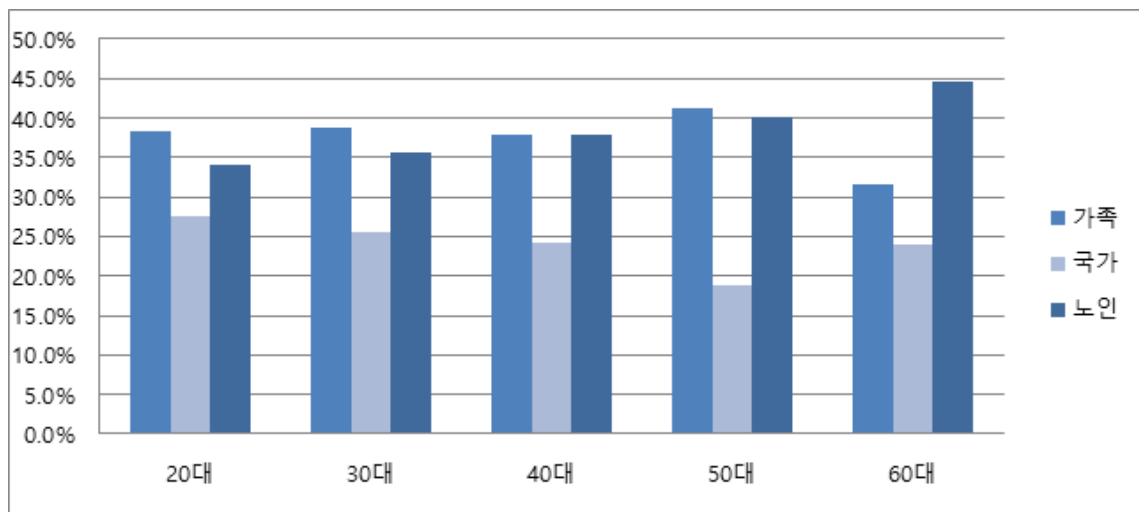
인정되는 조건에서 자녀에 대한 울인의 정서가 일반화된다. 자녀에게 울인하는 정서는 성별화된 규범 속에서 여성을 전업주부로 정체화한 문화 속에서, 지위획득을 열망한 조건에서 교육주부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확장된 부모의 역할에도 확대가족, 부부가족이념, 그리고 발전, 가부장적 이념이 혼재된다.

#### 4) 노부모 부양의 갈등

한국의 노인복지제도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저비용의 공공부조, 가족부양과 노년노동, 선별적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노년에 대한 사회 보험, 그리고 시장원리가 서로 결합되어 분절화된 체계로 만들어졌다. 외환 위기 이후 가족부양이 심각하게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과 서비스 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중립의 원칙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 원리가 강화되었다. 각종 금융, 효도상품 등이 노후대책으로 시장에 나오고, 중상류층 노년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삶의 모델들이 실험되고, 노후대비에 대한 지침서들이 책방에 쌓이고 있다(박경숙, 2009: 114-117).

이런 복지 제도의 특성은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세대 조사결과 응답자는 노인 부양에 대해 가족, 국가, 노인 스스로에 책임을 균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7]).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정도는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나 주관적으로는 지금의 젊은 세대도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국가 복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노인 자신의 책임도 모든 연령층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가족과 노인 스스로의 책임을 공히 강조하는 반면, 60 대에서는 가족 보다 노인 스스로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노부모가 자녀세대보다 더 자녀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박경숙 2009: 127-128). 60 대에서 자녀 부양 기대가 약화된 것은 노년층 내부에서도 실질소득이 상승하여 독립성의 가치가 확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60 대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부양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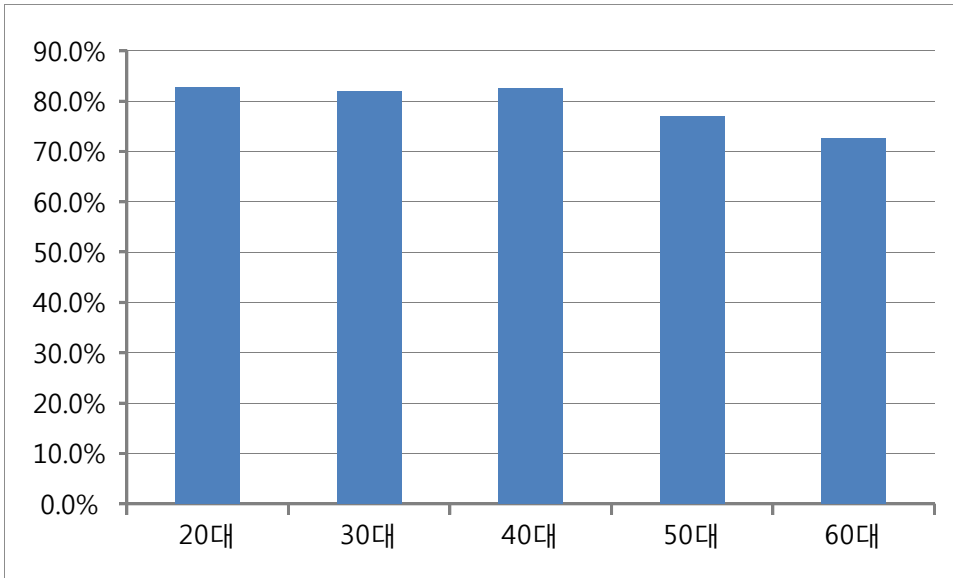
[그림 7] 노인 부양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 가족, 국가, 노인 스스로에 각각 가장 큰 점수를 준 그룹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84.

지금도 한국인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책임을 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0%가 자녀가 부양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림 8]).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역할에 대해 노인 당사자나 노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민할 50대 보다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노부모 부양을 위해 자녀는 필요한 걸 지원해야 한다’에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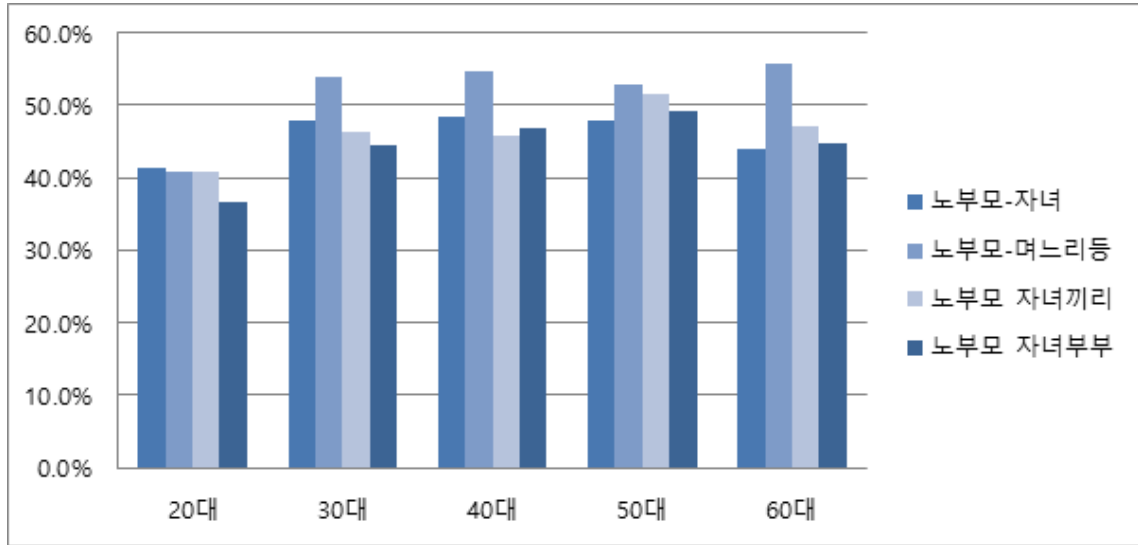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85

이렇게 규범적인 태도를 보면, 노년 부양의 가족적 기초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처럼 실제 자녀가 노후 부양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60대 응답자가 아직도 자녀를 도와주고 있거나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20-40대에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그러나 확실할 수 없는 마음의 표시일 수 있다. 감사의 태도가 부양 행위로 이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관념수준에서의 가족 부양인식과는 달리 부양현실에서는 적잖게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갈등이 확인되고 있다. 노부모와 사위 또는 며느리간의 갈등이 평균 50%가 넘었고, 노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 사이, 자녀의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크게 인식되었다. 또한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갈등은 자녀 부양을 두고 경험한 갈등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노부모 부양을 놓고 다음 당사자 간의 갈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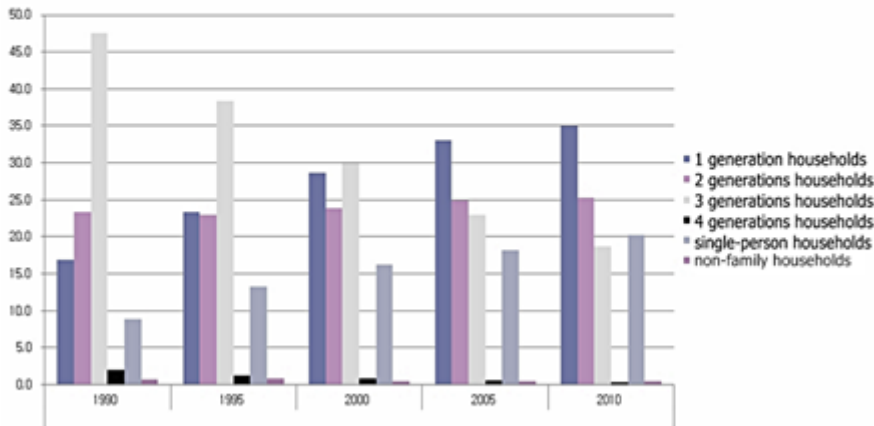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2013, 86

가족부양이 논란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맥락과 또 연계되는데, 하나는 가족부양이 가족관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부양의 억압적 측면과 관련된다. 전자와 관련해서, 급속한 가족관계의 변화 자체가 가족부양의 정당성을 재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자녀의 지원 기능도 점차적으로 더 약화되는 것을 강조한다. 후자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여성권이나 노년권의 입장에서 비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부양을 전제할 때, 누가 서비스 제공자가 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비판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효 이념은 직계적 가족관계 유지를 정당화하는 억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가치의 쇠락은 이러한 억압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획득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위임됨으로써 사회권의 확대가 제한되는 의미에서 노년권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유의할 수 있다.

1990년에는 3세대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중이 매우 컸다. 2세대가구에 속하는 비율과 합해보면 대다수의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세대 가구에 속한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30년 동안 1세대 가구 비율은 크게 증가한 대신, 2세대 가구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3세대 가구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1인가구 노인의 비율의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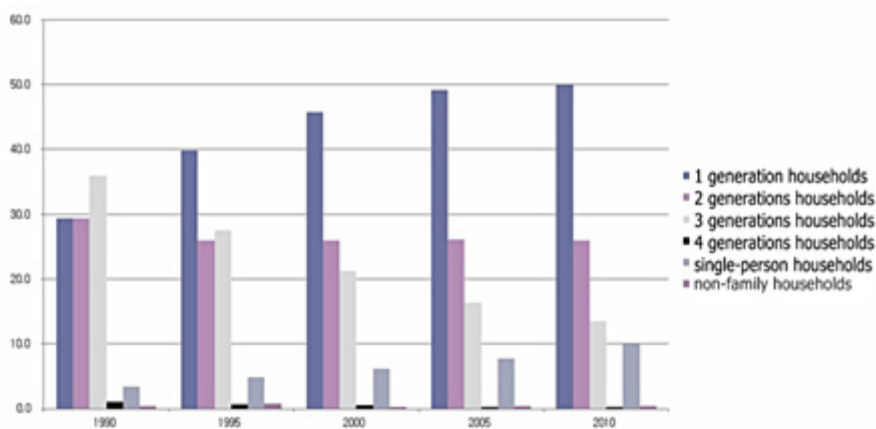
## Types of Households with Population of 65+, Korea, 1990-2010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가구형태의 변화는 또한 성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1990년 남성 노인의 가구형태는 1세대, 2세대, 3세대 가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된다. 그런데 2010년에는 50%가 1세대 가구에, 25%가 2세대 가구에, 13%가 3세대 가구에, 그리고 10% 정도가 1인가구에 속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부부만 함께 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부부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된다. 또한 혼자 사는 남성노인도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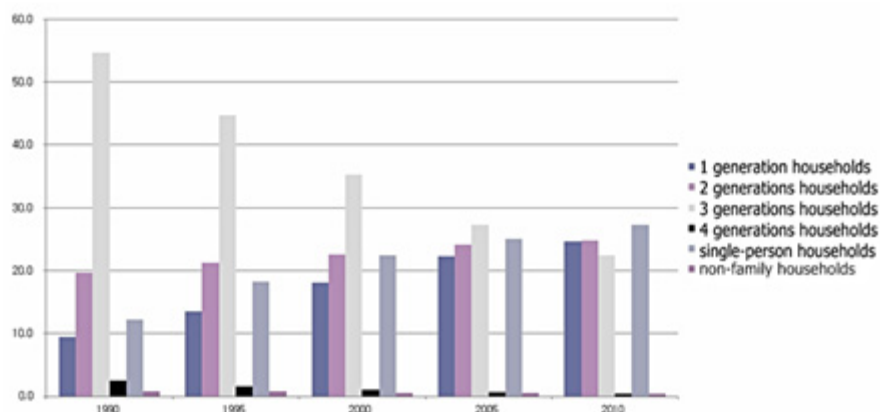
## Households with Population of 65+ (male), Korea, 1990-2010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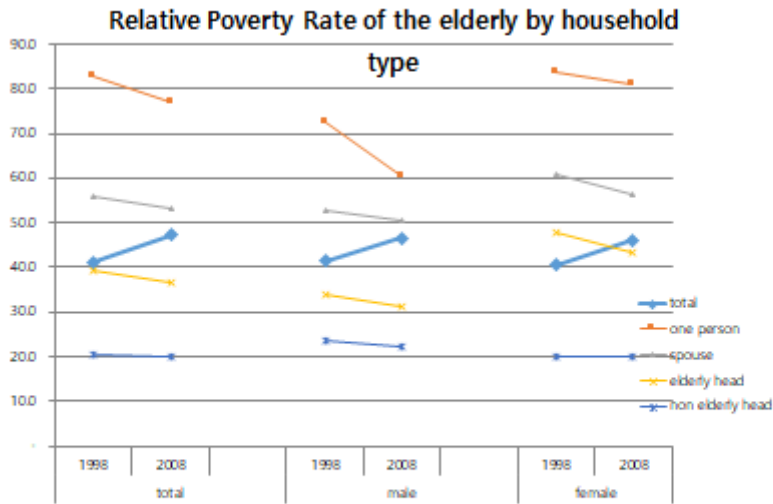
1990년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일반적인 가구형태는 3세대 가구이다. 70% 이상의 여성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았다. 한편 2010년 여성노인의 가구형태는 부부가구, 2세대가구, 3세대가구, 단독가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노년의 가구형태가 다양하고,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급속하게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가까운 시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Households with Population of 65+ (female), Korea,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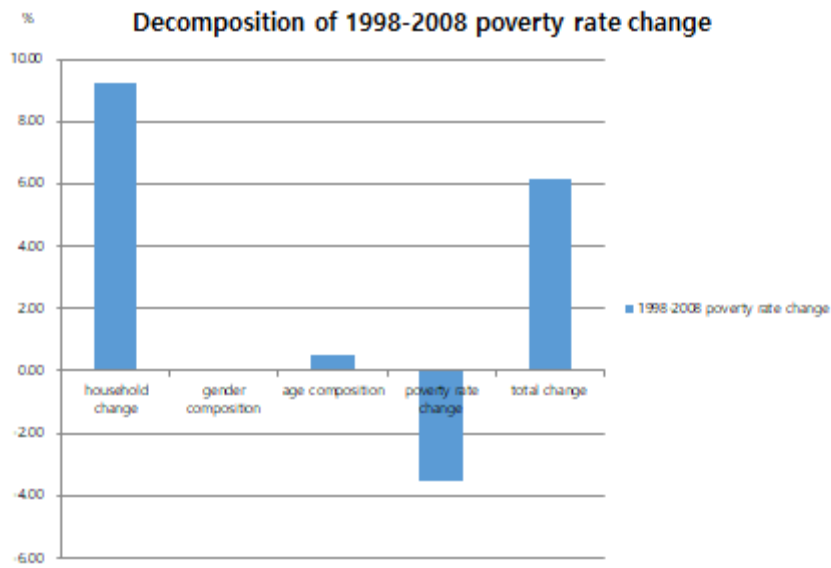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이런 가구형태의 변화는 노후 빈곤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은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노인 빈곤율의 변화를 가구형태별로 정리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0년 동안 증가하였다. 그림에서는 또한 가구형태별 빈곤율의 차이가 매우 큰데 가구형태별로 보면 각 가구형태에서 빈곤율이 감소한 추세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빈곤율이 상승한 것은 빈곤위험이 큰 1인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10년간의 빈곤율 변화의 요인을 분해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유형의 변화에 따른 빈곤율 상승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구성의 변화를 통제하였을 때 빈곤율이 감소한 것은 공적이전이 증가한 요인이나 노인의 개인 소득의 증가의 영향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source: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주: 박경숙, 김미선, 2016, "노인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빈곤을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 한국의 가족, 세대관계의 방과제인가, 갈등의 기폭제인가?

식민통치와 전쟁과 절대빈곤 시기를 지나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의 급격한 변화를 사 오십년이란 짧은 시기 동안 압축적으로 겪은 한국 사회는 그만큼 달라진 삶의 모습과 더불어 세대간 큰 가족 가치관의 차이를 갖게 됐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의 단절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조사에서도 가정의 권위에 대한 인식, 젠더역할, 남아선호 사상,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연령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가부장주의가 약하고, 성역할분업의식이 약하고 남녀동등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 결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젊을수록 약하게 보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 현상에는 개인주의나 남녀 동등한 젠더관의 영향도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상적인 배우자의 경제력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나, 동일한 계층지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관행이 젊은 세대에서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비혼화의 원인 중에는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읽을 수 있었다.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 등의 영역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발견되지만 그러나 다른 가족 가치관에서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다. 세대 갈등의 가능성이 큰 부양 문제에 있어서도 등가의 비용과 보상에 의한 ‘교환관계’ 보다는 자신의 것을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이타적 관계’에 더 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 가정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세대간 자원 경쟁에 있어서도 ‘세대 갈등 담론’과는 달리 상호 양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로 달려오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소홀히 해온 한국 사회에서 자원을 독점한 40, 50대와 무전세대인 젊은이, 노년층 간의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부양과 보호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은 갈등의 파도가 설새 없이 몰아치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방과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상이한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자신이 속한 세대와 타 세대를 독립되거나 경쟁하는 상대로 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경험에서 세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조직 내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세대관계를 통해 세대를 인식한다(송호근, 2003). 가족, 직장, 그리고 일상의 공공 장소에서 경험하는 세대관계를 통해 세대를 인식할 수 있다. 가족에서 노부모와 중장년 자녀의 관계와 중장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된 부분도 있고 지속되는 부분도 있다. 효에 대한 인식,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태도 등에서 다른 세대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세대간 부양을 강조하는 문화는 여러 세대를 통해 공유되는 부분도 크다. 한국의 중장년세대는 젊은 세대층의 실업과 주택난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의 눈으로서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관계에서 세대관계를 보는 방식과 공공 장소에서 세대관계를 보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가족 부양의 긴장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부양에 대해서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담 인식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특히 노후 부양의 긴장이 크게 보였다. 공적 복지가 취약하고 자신의 능력도 제한된 상황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노부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이타적인 태도가 갈등을 잠재우는 부분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세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지만, 실업, 비혼, 주거 불안 속에 있는 청년 자녀들의 울타리가 언제까지 되어줄 수 있는가도 회의적이다.

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이 같은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지점들은 또한 사회 수준의 세대 관계의 긴장과 결합되어 증폭되는 잠재성도 있다. 가족주의적 가치 지



향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틀이나 지평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상의 의식과 행위의 준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어 왔다(송재룡, 2005). 사회적 통합을 공동체 내부의 연대인 ‘통합성’ 과, 공동체 외부의 연결망인 ‘연계성’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현재 ‘다수의 개인들의 사심 없는 협동’ 이라고 일컬었던 일반화된 신뢰가 단지 직계가족 구성원과 혈족에게만 해당되는 밴필드가 말한 ‘비도덕적 가족주의’ (Michael Woolcock, 1998)에 해당하며 통합성은 높은 편이지만 연계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가족간의 지위와 자산획득의 경쟁을 촉발하였고, 사회안전망을 취약하게 만든 부분도 크다. 비혼화 현상도 성별분업구조와 가족주의, 그리고 발전주의가 결합되어 조성된 심리와 구조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부모의 교육열 속에서 자란 세대에서 독립된 삶을 형성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경쟁 전략과 경제구조의 갭이 커지면서 심화된 부분도 크다.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제공하는 선기능도 분명 상당하다. 그러나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 끼친 부작용도 분명 뿌리 깊다. 더욱이 가족주의로서는 전 세대에서 표출되고 있는 삶의 불안과 혼란을 막지 못하며 가족 자체도 위협에 봉착할 수 있다. 가족을 넘어 시민사회적 연대가 확장되는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세대 통합의 젠더, 가족의 기초

### 1) 가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아직도 전형적인 가족주의적 사회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정서적 기능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과 국가 의식은 강한데 사이를 연결하는 시민사회의 정체성이 낮고 시민사회가 발달되지 않음으로써 가족은 일차적으로 정서적 사랑과 안정, 자녀의 돌봄(care)과 교육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과 취업 그리고 노인부양에 이르기까지 가족부양과 가족 복지 기능을 과도하게 떠맡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회경제적 기능으로 인하여 가족 갈등이 노정되고 있어 정서적 기능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부부의 맞벌이와 과도한 근로시간, 사교육과 비싼 집값으로 가정 경제의 악화, 자녀 및 노인부양의 과다 등으로 가족마저 그 정서적 기능을 상실해 갈 때 청소년의 우울증, 약물복용, 비행, 범죄 노출 등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혼과 저출산 등 사회적 재생산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주어진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화하여 가족이 정서적 기능을 중심으로 본래적 역할로 자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세대 등 가족내 사랑과 정서적 유대는 세대간 소통과 화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자녀 교육과 성년 후 자녀 독립 그리고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가 그런 경제적 책임을 적극 떠맡아야 하며 사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 중심주의 즉 가족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정부나 시민사회 주도의 보편적인 복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의식 속에는 가족과 국가의 정체성 의식이 높으며 국가와 가족 사이를 연결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의식은 매우 낮다.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2) 효이념의 강조를 경계해야 한다.

노인의 소외는 여성이 그러했듯이, 단순히 가족에서만 아니라, 노동, 정치, 문화 전반에

서 파악되어야 하는 총체적인 박탈 현상이다. ‘희생자 비난’의 주장이 아니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노년의 지위 약화를 여성권익의 신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권력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 권력의 희생자들에게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노인의 소외도, 가족관계에서의 권력자원의 손실만이 아니라, 상품화된 교환 시스템에서 총체적으로 노년의 자원을 박탈한 결과에서 비롯한다. 상품경제에서 겪는 이런 박탈들이 중첩되어 가족 내에 이전되어 노인학대, 소외 등의 문제로 나타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적 박탈이 가족문제로 표현된 것이다. 부양을 둘러싼 老, 女의 갈등은 단순히 가족 내 권력경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과 노년의 갈등일 수 있다. 세대관계의 현대적 도덕은 권위주의와의 결별, 강제화 된 희생의 부정, 등 많은 의미들의 수정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가족관계 밖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를 던진다.

(3) 생애를 통해 타자와의 친밀성을 남녀 모두 학습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와 활동에 딸들이 아들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장되고 있는 것 같다. 여성 생애에서 친밀함의 관계가 단절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에서 심하게 단절되는 경험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만일 그러하다면, 세대관계를 지속케 하는 가족관계는 남녀 공히 친밀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시공간의 조직일 수 있다. 그리고 남녀가 공히 친밀함에 익숙해지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종의 결합작용이 일어나, 양쪽의 세대관계가 조화롭게 친밀해 질 수도 있다고 본다.

(4) 덜 경쟁적이고 공유하는 사회환경이어야 한다.

친밀함은 훨씬 덜 경쟁적이고 공유하는 사회구조를 전제로 한다. 현대의 복잡화된 사회에서 가족관계가 원인이고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원이 개발중심으로 투자되고, 속도가 매우 빠르고, 노동력이 쉽게 대체되는 사회에서 노년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쉽다. 또한 가족이 유일한 계층적 지위 획득기체인 사회, 유일한 사회 안정망인 사회에서 노년의 안전이 위태롭다. 이는 가족 중심 사회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적으로 확산된다는 가정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가족수준에서 이익, 보호를 극대화하는 심성은 사회적 정의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 · 문화 분야에서의 세대 통합 방향과 과제**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세대통합 방향과 과제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 차

세대통합의 저해 원인: 세대갈등 현황

세대통합의 필요성

세대통합 증진 방안

## 세대통합의 저해 요인: 세대갈등 현황

- **세대 정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 출생집단 (Karl Mannheim)
- 세대 차이는 어느 나라, 어느시대에나 존재한 보편적 사회현상중 하나
- 세대 차이가 반드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
- **세대마다 가치규범과 행동양식이 다를 수 있음. 이는 사회변동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 세대차이, 세대갈등

- 한국의 3대 사회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 Inglehart: 한국 사회는 매우 큰 세대 차이를 보이는 사회
  - \* 43개 산업화국가의 세대차관련 조사연구(1997)
- 한국사회 세대갈등 문제는 단순 갈등이 아닌 구조적 차원과도 연관

## - 세대차이, 세대갈등 배경원인

- 압축적 고령화+ 압축적 경제성장(경제양극화, 저성장 등)+ 압축적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 > 세대차이, 세대단절, 세대갈등 야기 가능성
- 젊음, 외모 지상주의 문화
- 정보화로 인한 세대간 간극: 아날로그 vs 디지털 세대
- 언어, 의식, 행동 격차 및 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간 문화 차이와 정보격차 유발



## - 세대인식 차이



다름 인정해야 '세대갈등' 해결..."틀린 게 아니다" - 아시아경제(2017.6.19)

## - 세대갈등 양상

- 일자리 경쟁: 청년실업,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 세대간 이념 및 가치관 차이 세대간 편견, 부정적 이미지, 잘못된 인식
- 이념, 정치 견해 차이 : 진보와 보수, '태극기·촛불' 세대
- 경제적 이해 충돌: 사회비용 증가(복지예산 증가, 청년층 부담 증가, 연금 고갈 위험 등과 결부), 부양 의무, 주택문제(예: 청년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세대갈등 '심하다'(6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전반적 갈등수준에 대해 '매우 심하다'(8.5%), '대체로 심하다'(71.8%) 등 심하다 의견 80.3%
- 국민통합조사결과(2015): 국민 2명중 1명은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 66.6%가 앞으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 세대갈등, 세대반감, 세대차별, 세대혐오로 이어질 수 있음
- 'Gerontophobia': 노화(늙는 것)를 두려워하고 노인 혐오하는 현상
- 단순히 노인, 노화를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인이 사회의 주요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쟁, 기초연금 폐지 청원 등

## 세대통합 필요성

- 세대통합: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 다른 세대들이 사회구성원임을 인지, 선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협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충족과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상태
- 세대 단절, 세대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 유발, 사회의 양분화 및 양극화로 인해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 고령사회 대응 방안

- 세대통합을 통해 세대간 이해, 교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 공동체성 회복

- 우리사회는 OECD중 공동체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동아일보, 2016). 공동체성 상실은 이전 상호부조로 어려움을 해결하던 우리 사회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를 의미
- 세대 이해, 세대교류, 세대상생 등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이 가능. 세대통합은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토대가 될 수 있음

# 노인인권종합보고서의 노인인권 영역

## 노인인권 우선 과제

<b>영역 1   건강·돌봄</b> 1. 신체건강 2. 정신건강 3. 돌봄권	<b>영역 2   기본 생활(의식주)</b>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b>영역 3   소득</b> 1. 빈곤 예방 및 해소 2. 소득
<b>영역 4   고용·노동</b> 1. 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2. 근로환경 3. 가족 돌봄노동	<b>영역 5   사회참여 통합</b> 1. 사회활동 참여 2. 세대교류 및 소통	<b>영역 6   존엄·안전</b>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2. 생명권 3. 안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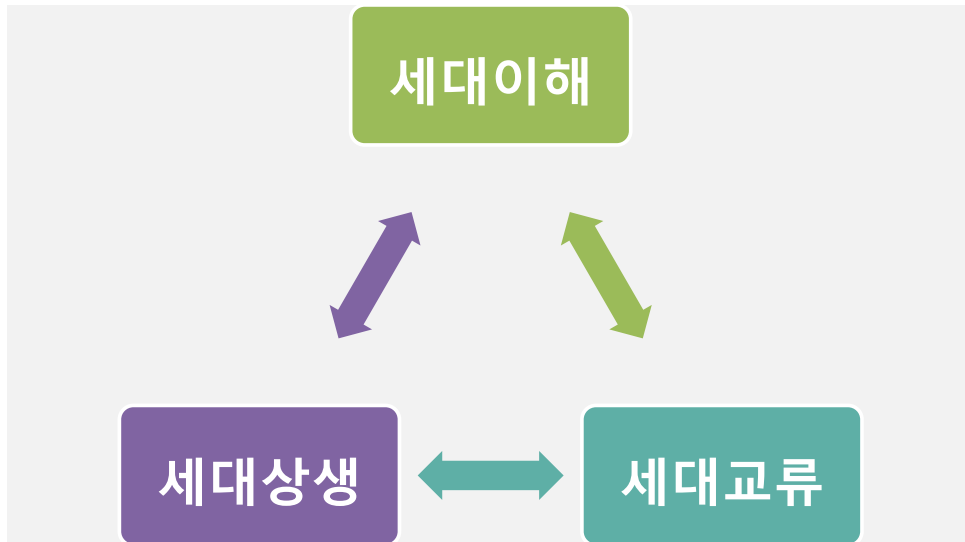
No	영역	노인층 조사*				전문가 조사		A+B (C)	최종 (C역순위) (D)
		경험율	평균	경험율 X 평균	a 순위	IPA	IPA 순위		
				(a)	(A)	(b)	(B)		
1	신체건강 증진	18.6	1.785	33.108	12	1.6	13	25	15순위
2	정신건강 증진	15.9	1.765	28.063	15	2.87857	2	17	9순위
3	돌봄권 보장	16.3	1.76	28.712	14	2.01429	10	24	13순위
4	의생활 보장	22.2	1.96	43.534	10	1.14286	16	26	16순위
5	식생활 보장	20.1	1.93	38.713	11	1.53571	14	25	14순위
6	주생활 보장	17.1	1.84	31.464	13	2.16429	6	19	10순위
7	빈곤예방 및 해소	27.9	2.12	59.148	5	2.20714	5	10	2순위
8	소득 보장	26.6	2.05	54.53	6	2.08571	7	13	6순위
9	일자리/고용기회 보장	57.73	2.5	134.5	1	1.97857	11	12	5순위
10	근로환경 개선	53.4	2.5	133.32	2	1.91429	12	14	8순위
11	가족 돌봄노동 보호 및 지원	29.8	2.12	63.176	4	2.06429	9	13	6순위
12	사회활동참여 활성화	22.4	1.99	44.58	9	1.43571	15	24	12순위
13	세대교류 및 소통 증진	35.55	2.235	79.45	3	2.07143	8	11	3순위
14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15.5	1.71	26.5	16	2.49286	3	19	11순위
15	생명권 보호	24.8	1.855	46	8	2.95714	1	9	1순위
16	안전권 보장	25.8	1.9	49.038	7	2.37857	4	11	3순위

# 세대통합 증진 방안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세대통합 방향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6/91(December, 1991)



## 세대이해

- 세대에 대해 깨달아 앎. 또는 세대를 잘 알아서 받아들임
- 세대간 환경, 경험이 달리 성장/세대 인식 차이 인정
- 열린 마음, 다양성 인정, 조화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 중요

## 세대교류

- 세대간 접촉과정을 통해 소통, 공감대 형성, 자원을 나눔으로 함께 성장, 발전해갈 수 있음

## 세대상생

- 세대간 배려, 양보, 타협하며,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 세대 형평성과 관련

## 세대이해

### 세대통합

#### 규범 내재화

- 세대이해, 세대공동체 교육 실시
- 세대통합 인식 고양, 캠페인 등

## 세대교류

### 세대통합

#### 문화 조성

- 세대통합 프로그램 지원
- 세대통합 친화환경 확충
  - 세대통합 친화공간 마련
  - 세대친화 직장환경 조성
  -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세대상생

### 세대통합

#### 제도 구축

- 세대통합 증진 정책기반 조성
- 세대통합 협의기구 구성
- 지역사회 세대통합 협력체계 마련
- 세대통합 연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 세대통합 증진 방안(1)

### 1. 세대 통합 규범 내재화

- 수직적, 전통적 의사결정 -> 다양성 존중, 수평적 의사결정
- 세대간 상호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다양성을 인정, 조화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
-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차이를 용납하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
- 세대간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 통해 세대장벽 약화 및 상호 이해력 제고

## 1) 세대이해, 세대공동체 교육 실시

- 노인, 노화 이해, 세대 공감 등 세대 이해 교육
- 각 세대의 성장 시대상황, 세대특성 /각 생애단계에서 특성/의사소통 촉진 & 감정 조절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치 경제 문화 테크놀로지 발전 등
- 세대통합 가치(세대간 포용과 상호 가치관 존중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 세대차이 및 세대갈등에 관한 이해 및 세대 간 예절 및 친절 교육

### - 세대공동체 교육

- 교과수업 및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과수업과 연계한 세대 통합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세대통합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지원

- 노인대상 정보화 교육: 정보격차 완화,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함

\* 세대간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divide) 해소를 위해 ICT 역량은 디지털기기 사용법 습득은 물론, 이를 통한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업능력 등을 포함



## 2) 세대통합 인식 고양, 캠페인 등

- 미디어의 세대통합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 중요
- 미디어를 통한 세대통합: 나이 늙음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노인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세대간 소통 등
- 세대 간 합리적 행동규범이나 에티켓을 보여주는 공익광고나 동영상, 플래시 등의 제작, 공급 등

We're supporting

**AGE POSITIVE**



**양코르닷오알지(Encore.org): '세대에서 세대로(Generation to Generation)' 캠페인**

### **Building Bridges Across the Generational Divide**

Despite all the hand-wringing about the graying of America, the needs and assets of older and younger people are complementary. The key is to overcome our habits of age segregation.



## 세대통합 증진 과제(2)

### 2. 세대 통합문화 조성

#### 1) 세대통합 프로그램 지원

- 세대통합 프로그램 정의: 각 세대가 상대 세대를 도와주고 공동 활동을 하며 학습 기회도 함께 갖는 프로그램
- 목적: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상호이해 폭을 넓히고 결속을 돕기 위함
- 효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상호교류와 서로에 대한 이해 기회를 갖게 되며, 노인세대는 노후생활 만족감 증진과 기타 세대와의 소통을 경험, 사회 참여에의 의지 증가/ 1, 3세대 간 교류 기회 증가, 세대간 이해 증진,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

-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기관에 세대교류 프로그램 권장 및 지원
  - 다세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 세대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장노년층이 쌓아온 직무경험, 인생 경륜을 토대로 재능을 나누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 세대 화합 촉진 프로그램: 서울시 '어르신과 마을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사업'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 세대공감 결혼토크

정신이라는 주제가 대원

세대별 다양한 의견 소통

2018. 10. 15(월) 15:00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공연장(4층)

♡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부모, 미혼남녀, 예비부부 등)  
♡ 신청일수: 2018. 9. 10(일)부터  
♡ 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20명 선착순 접수)  
\*접수처: 대구문화재단(www.dabn.co.kr/wedding)  
\*예약전화: 김윤성(051-867-3302)

♡ 진행자

MC 100	MC 100	MC 100	MC 100
이혜영	김민정	김민정	이혜영

MC 100 소개: MC 100은 결혼식 진행을 도와주는 MC입니다. MC 100은 결혼식 진행을 도와주는 MC입니다. MC 100은 결혼식 진행을 도와주는 MC입니다.

## 세대공감 행복사진 공모전

행복이라는 주제가 대원

행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여, 한이내 3세대 손주 손녀 행복한 순간을 담은 '세대공감 행복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행복, 그 행복한 순간이 가득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 사랑과 존경을 담아주는 이번 세대공감 행복사진 공모전에 대구시민과 외국인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제: 주제별: '행복'을 주제로 한 사진(1인 1장)은 가족과 세대간의 소통

● 참가기간: 2018년 10월 8일(수) ~ 11월 9일(수)

● 공모처: 대구문화재단

● 공모제: 주제별: '행복'을 주제로 한 사진(1인 1장)은 가족과 세대간의 소통

● 참가기간: 2018년 10월 8일(수) ~ 11월 9일(수)

● 공모처: 대구문화재단

## 1-3 세대 어울림 효사랑 콘서트

### 제4회 투원 페스티벌

2015. 10. 17(토요일) 오후 2시-4시  
관악문화관(관악구 신원동 209-11 서울대학교 청운도보 10층)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가능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에게는 도시락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02-6015-6245

# MEMORO

기억의 은행

로그인 · 회원가입 | Memo

!로 소개   영상보기   UCC 공모전 수상작   참여하기   커뮤니티   메모로코리아 글로벌사이트

## "소중한 기억, 아름다운 공감"

세계적인 비영리 프로젝트인 MEMORO 「기억의 은행」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온라인 아카이브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기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가하여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메모로 활동/ 잊지 말고 기억하기 이태리 시작, 2013년 일본. 비영리 공익활동, 메모로 코리아. 60세 이상 대상 그 이하 동영상, 삶의 경험, 후세 구전 역사 동영상 찍고 사이트 올리기. 기억은행 별칭

- 꽃소동(꽃으로 소통하는 우리 동네): 경기군포문화재단, 지역청년문화기획사 밸류 브릿지와 공동프로젝트



▲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꽃 소동' [사진 제공=군포문화재단]



## 이천 어르신들 1인 방송 도전, '할프리카TV'

이천문화원·이제이팩토리, 유튜브 영상채널 할프리카TV 제작

함윤식 기자 승인 2018.10.10 14:58 댓글 0



유튜브채널 할프리카TV 영상촬영

- 어르신 인생 경험 아이디어 제시, 청년들이 젊은 감각으로 콘텐츠 제작/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 일본의 고령자-아동 체육대회



캐나다 "The Meadows School Project(MSP)"

"공간공유를 통한 몰입형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 영국 RSVP 세대통합 프로그램

- 그랜드멘토(Grandmentors)
- 기술교환(Skills Swap) 프로그램
- Dark Horse Venture: Inside Out Projects
- Advocat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미국 PALETTE 프로그램 (Promoting Art for Life Enrichment through Transgenerational Engagement)

- 세대상호성(intergenerational reciprocity) 강조
- 보건전공학생 및 활동적 노인이 함께 창의적 예술활동에 참여. 학생들은 부정적 노인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었고, 노화에 대한 염려를 감소하게 됨. 노인은 지속적으로 사회활동 역할을 부여받는 효과를 지님

## 2) 세대통합 친화환경 확충

### (1) 세대통합 친화공간 마련

-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대통합 공간 조성

- 노인시설과 아동시설, 그리고 다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증대
-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어린이시설, 및 공공시설 혼합: 세대혼합 및 민관혼합 시설을 건립, 세대교류 환경 조성. 공유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세대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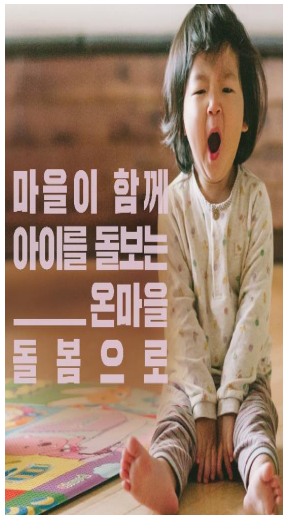
- 일본 경우 세대공존형 주거모델, 다세대주택 개발이 잘 형성됨
- 세대공존형 주택 '유이마루 (ゆいま~る): 도쿄도 히노(日野)시에 위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 독립 공간을 가지고 한 단지에서 공존
- 다세대주택 '느리게 사는 주택':

- 나고야시 위치. 1층은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거 공간, 2층은 비노인층 여러 가구가 있음. 가구마다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화장실 등을 별도 있음. 저렴한 집세

- 독일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aus)'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의 한 공간에서 여러 수업과 이벤트 등을 개최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제공
- 재정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세대하우스 당 연간 4만 유로기금을 지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3/4을, 나머지 1/4은 주 정부에서 후원



- 크리에이티브하우스 베를린(Das KREATIVHAUS Berlin): '다세대하우스', '가족센터' 등이 있음.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아이들과 부모, 어르신들이 한 데 모여 수업,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



함께 오순도순 서로 톡톡탁탁  
같이 살면 행복해요

**한지붕세대공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한지붕세대공감이란?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아버지, 할머니가 남은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꺼비 세입에서 한지붕세대공감 신청하세요

문의 120 | 접수처 재치구 소: **두꺼비세입** www.dukkubisesang.co.kr | 한지붕세대공감 | 임대

구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대입생	서울시 영구거주하는 주택용 1세대분류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미리 신청
학생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신청 후 신청

월 15만 100만원 이내 합동 거주로서 생활상적 필요 충족 분담  
무보증금  
이웃과 근한반 주거공간



## (2) 세대친화 직장환경 조성

- 연령이나 서열보다 직무와 역할을 중시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임금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 전환: 근속연수와 무관, 직무 가치와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임금 결정
- 세대공존 일자리 발굴: 협동조합,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등 활용, 상생적 일자리에 취업 지원
-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 창업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중장년 경험,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계, 세대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
- 전문경력직 퇴직자와 창업예비자간 '멘토링' 등

## (3) 고령친화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커뮤니티 조성
- 노인을 포함, 모든 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영역을 넘어선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시설안전, 소통환경 등 물리적 환경 조성에 역점 둠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구성



자료 : WHO, 2007

- 모든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대친화적 지역사회(cross-generational community). '모든 연령에게 친화적 지역사회(Communities for All Ages)'라 할 수 있음

# 세대통합 증진 과제(3)

## 3. 세대 통합 제도 구축

### 1) 세대통합 증진 정책기반 조성

- 관련 국가정책 기본계획에서 세대통합 반영, 구체적 실행 정책 확산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세대간 이해 증진' 포함. 실행 내용이 제한적임



#### »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날' 운영(연 1회이상)
  - \* (학교) 학생은 가족이 정한 날은 체험학습의 날로 인정 (경제·사회단체) 회원사 및 직원 참여 유도위한 홍보 강화
- 고령자와 유·아동(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간 접촉·소통기회 확대('16)
  - 실버 문화·예술공연, 학교 앞 교통지도 및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대간 소통 강화('16~)
  - 초·중·고 학생 가정과 무연고 독거노인과의 1:1 결연 등을 통해 효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화에 대한 이해 제고
  - 1·3세대가 함께 문화재·역사유적 탐방 등에 참여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세대공감콘서트 확대

#### »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 인성회복을 통한 효행·예절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 강화 및 법상머리 교육 활성화
  - \* 체험형 법상머리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15. 147개교) 확대
-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발굴 포상,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효행장려 풍토 조성('16~)

- 세대통합 가치 실현을 위해 세대통합적 관점에서의 제반 정책 입안 및 실행이 필요함

- 예: 세대통합 공간 마련 → 주거정책 발상 전환. 주택관련 세제지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건축자금 지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 주거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

- 세대통합 증진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지자체 조례 제정

## 2) 세대통합 협의기구 구성

- 세대통합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환경 조성: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노인 및 장년,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복지수혜, 부담의 배분 논의 등 국가재정과 복지제도에서 세대 간 타협점을 찾는 등 각 세대 대표자, 관련 공무원 등 세대통합 협의기구 구성

### 3) 지역사회 세대통합 협력체계 마련

-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 서로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
- 지역사회 세대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세대 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경로당,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多)세대 이용 등)

### 4) 세대통합 연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 세대통합 관련 연구 협력 및 다학제적 접근(복지, 교육, 경제, 행정, 정치,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필요함
-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실천현장 전문가, 교원 대상 세대통합 연수 실시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임 홍 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 토론문

### 『세대갈등과 통합의 미시적 기초 : 젠더와 가족』

2018. 11. 22.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임홍재

#### □ 들어가는 말

노인혐오 현상으로 이어지는 세대갈등은 단순한 사회적 단면이 아닌,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양상과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상이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복합적 양상을 젠더와 가족주의의 관점에서 담아냄으로써 혐오와 세대갈등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발제자의 세대갈등 관련 언급 중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과치관과 젠더의식의 차이로 본 세대갈등 관련이다.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 결혼관, 성역할 등 가족가치관과 젠더의식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나, 전통적 고정관념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어릴 때부터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한 청년층의 가치관은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가치관의 상이함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세대갈등과 노인혐오 관련이다.

가족 및 젠더의식의 차이 등 가치관의 상이함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할 때, 사회구성원의 시민사회적 연대가 약할 때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대갈등으로 촉발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갈등과 노인혐오 현상은 단순히 개개인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 특정연령대의 사회구성원을 ‘비정상’ 또는 ‘우매한’ 집단으로 그룹화하고, 이러한 집단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정당화한다. 즉, 노인혐오를 정당화함으로써 노인세대가 처한 인권침해의 현실은 쉽게 가려지고 부정당하기도 한다. OECD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압도적인 1위이며, 특히 76세 이상의 빈곤율은 60%를 넘어섰다. 노인의 절대적 다수가 빈곤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혐오는 노인인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 발제자가 제시한 세대갈등과 노인혐오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고령사회를 맞이한 현 시점, 노인부양을 포함한 가족부양과 복지 기능을 가족에게 전담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초한 사회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동감한다. 노인인권의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과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과 가족 중심의 부양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즉 가족중심의 가치관에서 시민사회적 연대의 가치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 맺는 말

세대갈등과 노인혐오 현상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생산성과 성과 위주의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정보기술과 미디어의 접근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 세대에서 생산되는 인터넷 상 혐오발언과 가치관은 실제로 노인이 처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지가 크다. 사회의 책임과 안전망 확대, 전 세대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 정부와 미디어의 책임 있는 노력이 노인혐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스며든 다양한 혐오를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토론문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세대통합 방향과 과제』

#### □ 들어가는 말

발제자는 세대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여러 현상을 분석,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크게 세대 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으로 나뉘어지는데 Inglehart의 연구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우리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큰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는 구조적 차원과도 연관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고도로 발달한 IT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간극도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 압축적인 경제 성장 등은 큰 사회갈등을 야기한다.

#### □ 발제자가 세대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세대 간 통합 방안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세대 이해, 세대 상승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본인도 전체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상호 협력에 대한 원인분석 혹은 현상에 대한 진단은 충분한데 현실적인 해결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사료된다. 둘째, 세대통합에 대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를 통합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동감한다. 한편, 미디어를 통한 인식 고양, 캠페인 등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미디어 영향력은 그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교육보다 강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견해에 동감한다. 영국의 RSVP 세대통합 프로그램,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PALETTE 프로그램 등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꿈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표에서 언급된 일본의 ‘느리게 사는 주택’ 역시 노인과 非노인이 어우러져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로 보인다.

#### □ 맺는말

첫째, 세대통합 증진 정책기반 조성: 세대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입안 및 실행이 내재화 및 주류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세대통합 협의기구 구성: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이 협의 기구에 세대 간 균형 유지를 위한 노인 및 장년,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셋째, 지역사회 세대통합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세대통합 연구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세대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는 적절하다.



토론문

고 선 주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 관장)



핵인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최근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는 ‘핵’ 자를 붙입니다. ‘핵인싸’란 매우 강조하는 뜻의 ‘핵’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사이드(insider)’의 합성어로,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 걸도는 아웃사이드와는 다르게 무리 속에서 아주 잘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을 뜻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타자에 대한 혐오발화가 쏟아지고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상이 그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혐오를 표현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 자신도 그 혐오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구속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이 혐오에서 예외일 수 없단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서는 세대갈등과 통합의 기초를 젠더와 가족으로 설명해주셨고 또한 사회문화적 지원체계마련으로 세대통합의 실질적 접근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두 분 발제자의 고견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새로운 세대로 부상한 중장년층과 함께 당사자주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으로써 두 분 발제자분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기에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기보다 제가 캠퍼스에서 체험하고 있는 세대간 공존의 방식을 더하는 것으로 토론을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혐오와 세대갈등을 넘어선 세대간 공존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변화가 향후 세대공존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서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노력을 자신이 하기 보다는 상대에게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갈등상황에서 상대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과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로 세대공존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노인입장에서 세대공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세대가 어떻게 세대갈등과 세대공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청년세대보다 노인세대만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세대공존의 답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캠퍼스의 경험을 토대로 노인세대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플러스세대를 포함하여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은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을 뒤흔들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등이 높은 지금의 한국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힘들게 오래 사는 노인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노인세대 내의 다양성입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연령기준을 넘어 노인세대 안에는 매우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세대가 노인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빈곤하지만 분명히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의 부유층 노인도 존재합니다. 또한 제1직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노인층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를 청년세대와 결합하는 형태로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고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더 여유있는 노인층의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청년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공감하는 어른으로서의 노인을 말씀드립니다.

50플러스캠퍼스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대개 취업과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50+전환상담의 70% 이상이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일자리는 타 전문기관을 연계하지만 사회공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서울시 공헌형일자리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사전선발과 전환교육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캠퍼스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제1경력에서 지냈던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고 누군가 타인과 수평적인 관계맺기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연공서열이라는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한국의 조직사회에서 나이라는 요소는 매우 권력과 연관이 큼니다. 농경사회에서 경험과 지식으로 연장자가 예우받았던 것뿐 아니라 산업사회에서도 연차에 따른 경험누적이라는 승진시스템은 사실상 연장자가 권력을 갖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위계질서가 매우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캠퍼스에 처음 오시는 분은 내려놓았다고 본인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역할없음과 지위없음에 익숙하지 않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내 지위가 생계부양자로서의 가장의 역할에 익숙하셨다가 부양자 역할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는 50+이후의 일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성공과 소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를 찾는 새로운 일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있지만 참여 경험은 없는 세대에게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전환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기에 정책과 사업으로 이러한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비로소 꿈꾸던 일을 찾고 다른 세대와 공존하고 함께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환 방식의 한 예가 전환교육입니다. 전체 정규과정에서 ‘전환’ 키워드를 담도록 설계하고 일자리 사업에서도 단기더라도 이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 직무 공통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 보람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수행을 위한 기초·핵심역량 개발 및 50+당사자성 강화</li> <li>- 공헌형 일자리 참여에 따른 ‘50+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소통·관계·협업·문제발견과 솔루션 도출 등 액션러닝 과정을 통한 인식의 전환 및 주요스킬 증진</li> <li>○ 교육내용 : 50+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직업관과 직업윤리, 앙코르커리어 이해 및 탐색</li> </ul>	
과정구분	교육목표
공통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 I . 들어가기(Intro)</li> <li>- 마음열기, 50+ 삶의 변화인식</li> <li>-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한 출발선과 눈높이 맞추기</li> </ul>
공통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 II . 자기이해와 공감 (Reframing)</li> <li>- 마음먹기 : 성찰을 통한 자신과 타인 이해하고 공감하기</li> <li>- 환경변화 및 사회참여활동에 따른 다양한 직면상황에 대해, 소통·관계·협업·당사자성·직업의식 등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 다지기</li> </ul>
공통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 III . 도전과 가치실현 (Motivation)</li> <li>- 일과 삶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직무미션 수립</li> <li>- ‘개인과 공동의 목적의식’ 및 ‘실천과 실행력’ 넓히기</li> <li>※ 사업별 교육운영 시, 각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 기획·진행</li> </ul>
<p>※ 재참여자의 경우, 모듈 I 들어가기(Intro) 및 case study2. 작지만 의미있는 도전 I (개인-기참여자원) 선택참여 가능</p>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간의 세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데 그 노력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가요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청년세대는 청년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노인세대는 노인과 청년 두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의 미래가 현재의 노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의 과거가 현재의 청년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서로의 실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한다면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편입의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일이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50플러스캠퍼스에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가장 큰 50+이후의 활동은 자신이 지닌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설팅’ 이나 ‘강의’ 라는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전문적인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닐 수 있고 또한 과거세대가 지녔던 노하우와 경험이 현재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누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여전이 유용함을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세대가 윗세대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캠퍼스에서 청소년시설 50+지원단 사업을 보람일자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직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은 가르치는 강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친구’입니다 ‘ 그렇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원하는 경험과 존재는 다른 법입니다.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반면 청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일자리와 주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통합 사업을 이러한 형태로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대통합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를 가르치고 이끄는 것만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노인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청년의 일이 될 수 없을까요?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삶과 성찰을 다루는 부분은 동년배 혹은 선배의 강의가 가장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 정보 등을 익히는 부분은 청년 강사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는 동년배 보조강사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나 청년세대의 윗세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주어지는 일이라면 청년세대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인턴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세대통합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통합방식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노인의 집에 청년이 들어가 사는 경우 청년들이 꺼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입니다. 청년의 요구하는 형태로 양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과정을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을 개량하고 1인가구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유부엌과 독립공간을 갖춘 주택사업이 노후해결방식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세대통합의 방식은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대간 윈윈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다른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이 기반위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 다양한 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찾아서 이를 섬세하게 매칭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